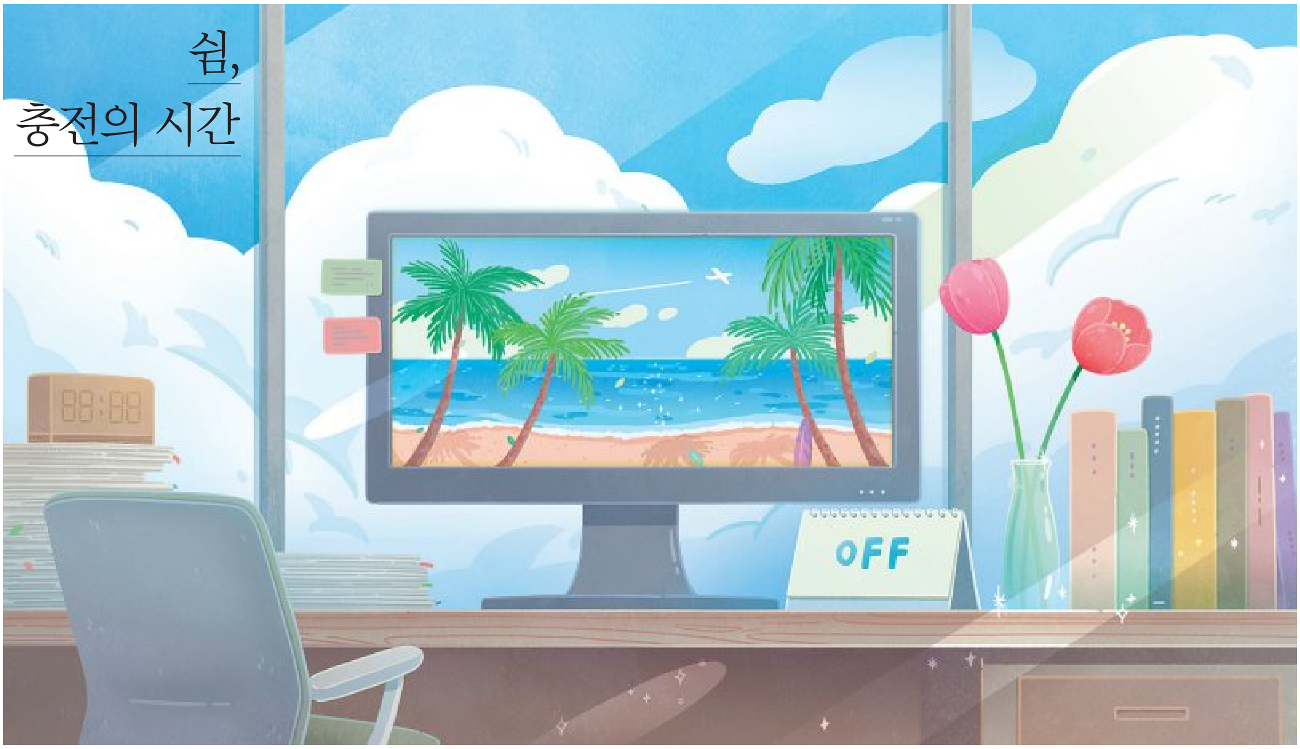
SINCE 1949

# 국회보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 소식지




**2022. 08**

**VOL. 669**

2022년 제21대국회는 일상의 행복을 다시 찾겠습니다.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을 드리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국회사무처
NATIONAL ASSEMBLY SECRETARIAT

# CONTENTS

04

05

05

26

국회보

**2022. 08 / VOL. 669**

**간행물발간등록번호**
31-9710176-000680-06 ISSN1975-7581

**발행일**
2022년 8월 1일

**발행인**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국회홍보출판위원회**
박장호 위원장(입법차장)
유상조 위원(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위원(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지동하 위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수옥 위원(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한웅현 위원(문화소통기획관)
정환철 위원(공보기획관)
현은희 위원(국회부산도서관장)
강준희 간사(문화소통담당관)

**국회보편집실무위원회**
성종호(보좌관), 한주연(비서관), 하상우(서기관)

**편집진**
**글** 김현아(취재보도사무관), 고영선, 박민선, 윤성혜
**사진** 김지범(촬영사무관), 임진완, 김진원, 유윤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6788-2058 book@assembly.go.kr
**디자인·인쇄** ㈜이팝 02)514-7567

**04 지금 국회에서는**
제21대국회 후반기 김진표 국회의장 당선
제74주년 제헌절 경축식 열려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
제21대국회 후반기 상임위·특별위원장 선출
제21대국회 후반기 의장단·상임위원장단 국립현충원 참배
김진표 국회의장,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신임 국회사무총장에 이광재 전 의원

**15 특집 - 누리호 발사 성공의 의미와 우주강국을 위한 국회의 지원방안**
누리호 발사 성공까지의 경과 _진승보
우리의 힘으로, 인류를 이끌고, 우주로 _심채경
대한민국의 우주 개발 이슈와 발전 방향 _허환일
누리호 발사 이후 우주산업지원정책 _권현준
누리호 발사와 국회의 대응 _박연수

**26 의원연구단체 탐방** _서영교 의원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설 것"

**28 길에서 길을 찾다** _장동혁 의원
글로벌 관광레저·해양바이오 산업 중심 꿈꾸는 충남 보령·서천

**32 의원의 좌우명** _윤영덕 의원
'고달프고 힘든 자기성찰이 없는 한 삶의 질은 절대로 좋아질 수 없다'

**34 칭찬합시다** _박성민 의원
"현장에서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민생정치입니다"

**36 나의 인생 나의 정치** _김한규 의원
"사회 불평등과 격차 줄이는 정치하고 싶어"

※ 이 책의 우측 상단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28

32

34

36

**표지 이야기**

충전을 하는 이유는 에너지를 더 잘 쓰기 위함이지요. 국회는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앞을 내다보며 더 크게 도약하기 위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38 법률 시대를 읽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법' 개정 _고상근

**40 일하는 국회 공부하는 국회**
가상자산 시장의 투자자 보호방안,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 발급 개선 등 주제로 토론회 열려

**44 국회 주재관 리포트**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러시아 의회의 동향 _유승우

**47 국회 뉴스**

**54 법 시행 그 후**
'극지활동 진흥법'

**56 만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58 4차산업혁명의 현장을 찾아서**
미래시장 선점 위한 AI 반도체 개발

**60 국회 사람들**
"한의학으로 국회의 기(氣)를 끌어올리겠습니다"

**62 이 달의 서평**
주소 이야기 _이대영

**64 고전의 향연**
민족의 고전 '목민심서' 이야기 _박석무

**66 속기록으로 본 의정소사**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의 국회 승인 _이규진

**68 새로 읽는 중앙아시아사**
'중앙아시아의 나폴레옹' 티무르(Timur) _이광태

**71 국회의 풀꽃과 나무 이야기**
무궁화

**72 국회 미술관**
'대한민국건국' 민주공화국 탄생의 거대서사 _김준기

**76 우리 건축 이야기**
한국의 창 - 가족살이를 반영한 편안하고 아름다운 사실주의 구성미 _임석재

**80 바이러스의 역사**
2015년을 두렵게 만들었던 '메르스' _도현신

**82 산으로 떠나는 치유여행**
인제 방태산 아침가리골 _유인근

**86 생활 속 우리말글**
문장부호가 만드는 의미의 변화(2) _김풍기

**87 정치 관련 주요 일지**

# 제21대국회 후반기 김진표 국회의장 당선

7월 4일 열린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국회는 7월 4일 본회의를 열고 제21대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에 5선의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을 선출했다. 여야가 국회 원 구성에 합의해 열린 이날 본회의에서 김 의원은 총 투표수 275표 중 255표를 받아 국회의장에 당선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수락 연설에서 "여야가 의장 선출에 합의해 주셔서 참으로 다행이다. 조속히 원 구성 합의까지 이뤄주실 것을 여야 원내대표단에 당부드린다"며 "국회 개원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이고, 국민의 명령이다. 여야 지도부는 국민의 명령을 지체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당면한 민생경제 위기에 긴급하게 대응

김영주·정진석(좌·우) 국회부의장이 본회의에서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할 수 있도록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며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도 시급히 구성해 남은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에 착수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또 "갈등을 절망으로 키우는 정치가 아니라 협력으로 희망을 만드는 정치를 하자"며 "여러분 모두 대화와 타협에 능한 국회의원이 되어 달라. 저는 조정과 중재에 능숙한 국회의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의장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확고히 준수할 것이며,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대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주저 없이 제 역할을 다하는 의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장은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을 대폭 강화하고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을 개선해 정부 예산 편성 단계별로 예결위 및 상임위원회에 예비 보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35년 된 낡은 헌법 체계를 시대에 맞게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며 "지금까지 많은 개헌 논의가 있었고 사회적 공감대도 넓게 형성돼 있다. 이런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제21대국회 임기 안에 개헌을 이뤄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국회부의장으로는 4선의 김영주 의원과 5선의 정진석 의원이 선출됐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전임자인 김상희 국회부의장에 이은 두 번째 여성 국회부의장이다.

김영주 부의장은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께서 우리 국회에 바라는 것은 여야 간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보살피는 국회로 거듭나라는 것"이라며 "민생을 위해 여야가 정책적으로 경쟁하고 국익 앞에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상생의 정치를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석 부의장은 "우리는 모두 국회 밖 국민의 고단한 삶의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고 방치해선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 더욱더 시급한 것은 상임위원회 구성 문제"라며 "여야 모두 집단지성으로 작금의 민생위기를 타개하는 노력, 당장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 제74주년 제헌절 경축식 열려

김진표 국회의장이 7월 17일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 제74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국회는 '대한민국헌법' 제정을 기념하고 그 역사와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7월 17일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제74주년 제헌절 경축식'을 거행했다.

제헌절 경축식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해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한덕수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요인과 전직 국회의장, 정당대표 및 원내대표, 국회의원, 입법·사법·행정부 주요 인사, 주한외교사절단, 헌정회원, 제헌국회의원유족회 등 약 4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경축식은 국민의례, 주제 영상 상영, 감사패 수여, 헌정회장 기념사, 국회의장 경축사, 경축공연, 제헌절 노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감사패는 의회민

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한 김태룡 전 의원(제12대 국회의원)과 김일주 전 의원(제15대 국회의원)에게 수여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경축사에 이어 가수 이보람 씨와 리틀엔젤스예술단의 경축공연이 진행됐으며, 참석자 전원이 '제헌절 노래'를 부르며 제74주년 제헌절 경축식은 마무리됐다.

한편, 공식행사가 끝난 뒤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전직 국회의장단과 헌정회장 및 감사패 수상자들을 초청해 사랑재에서 오찬을 함께했다.

제74주년 제헌절 경축식에 참석한 김진표 국회의장(오른쪽에서 두 번째)과 내빈들

## 김진표 국회의장, "국민 통합을 위한 개헌, 더 이상 미뤄서는 안돼"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제헌절 경축사에서 "우리 사회는 그동안 개헌을 위해 많은 논의를 거치며 국민의 공감대도 폭넓게 형성돼 있어 이제 실천에 나설 때"라며 "국민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 미래의 문을 여는 새로운 방식의 개헌을 추진하자"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최근 국회가 의장 공석 상황을 한 달 넘게 이어왔고 아직 원 구성조차 마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시급히 원 구성을 끝내고 다시는 국회 공백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법과 관행을 정비하자"고 말했다.

또 개헌으로 권력 분산과 협력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우리는 대통령 한 사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에 진입했다"며 "5년 임기인 한 정권, 한 정당이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뛰어난 한 사람의 지도력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협력으로 운영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먼저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개헌의 시기와 방법, 범위를 검토하고 이를 위해 국회의장 직속 기구로 '개헌자문회의'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개헌 논의를 시작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줄 것도 당부했다.

김 의장은 "제21대국회 임기 안에 선거법 개정을 이뤄낼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며 국회법과 관련해 "국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을 대폭 강화해야 하고 주요 현안에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긴밀하게 협의하는 새 길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 지도부는 제헌절 경축식 참석에 앞서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김진표 의장 주재로 사전 환담을 했다. 김 의장은 "본회의 날짜는 기입을 해놨는데 본회의를 여는 열쇠가 아직 도착을 안 했다"며 여야를 향해 조속한 원 구성 합의를 당부했다.

#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월 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각각 7월 20일과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다.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민생 법안 처리에 최우선 순위 둘 것"

7월 20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언급하며 "더불어민주당은 하반기 정기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민생 관련 법안의 처리에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며 "정치와 국정 운영의 본질은 국민이 맘 편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제가 매우 어렵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중고로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일수록 국가는 어려운 서민과 민생을 챙기는 데 온 힘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민생입법과제로 유류세 대폭 인하, 근로자 식비 비과세 한도 인상,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지원 확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중소기업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장애인 이동권 보장, 대중교통비 한시적 환급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하반기 정기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민생 관련 법안의 처리에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월 2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표출된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해 온 민주당의 정체성,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를 지향하는 민주당의 가치를 지켜내고 시대의 변화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새로운 국정 방향은 오직 민생이 되어야"

7월 21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실패한 정책의 반복으로는 민생을 살릴 수 없다"면서 "국정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 새로운 국정 방향은 특정 집단의 당파적 이익이 아니라 오직 민생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만 산다'가 아닌 '내일을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내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렸고 국회 정상화가 늦어지면서 민생 대책은 지연됐다.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무한책임을 통감한다"며 "다시 시작하겠다. 초심의 자세로 국민의 뜻을 섬기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부동산 정책은 확고하다. 국민의 주거 안정과 합리적 조세 제도 수립이 목표"라며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부터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거 사다리를 되찾아오겠다"고 강조했다. 연금 개혁 문제와 관련해서는 "연금 문제는 세대 갈등을 넘어 미래를 위협하는 뇌관이 됐다"면서 "여야의 협치를 넘어선,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산업화는 우리의 첫 번째 도약이었고 정보화는 우리의 두 번째 도약이었다"며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와 김대중 대통령의 정보화에 이어 대한민국의 세 번째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 세 번째 도약으로 글로벌 선도국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제21대국회 후반기 상임위·특별위원장 선출

**권성동** 위원장
국회운영위원회

**김도읍** 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위원장
정무위원회

**박대출** 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유기홍** 위원장
교육위원회

**정청래** 위원장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윤재옥** 위원장
외교통일위원회

**이헌승** 위원장
국방위원회

**이채익** 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홍익표** 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병훈** 위원장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윤관석** 위원장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춘숙** 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전해철** 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김민기** 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조해진** 위원장
정보위원회

**권인숙** 위원장
여성가족위원회

**우원식**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7월 22일 열린 본회의 모습

국회는 7월 22일 본회의를 열고 제21대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및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출했다. 선출된 위원장은 다음과 같다.

△국회운영위원장 권성동 의원 △법제사법위원장 김도읍 의원 △정무위원장 백혜련 의원 △기획재정위원장 박대출 의원 △교육위원장 유기홍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정청래 의원 △외교통일위원장 윤재옥 의원 △국방위원장 이헌승 의원 △행정안전위원장 이채익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홍익표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소병훈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윤관석 의원 △보건복지위원장 정춘숙 의원 △환경노동위원장 전해철 의원 △국토교통위원장 김민기 의원 △정보위원장 조해진 의원 △여성가족위원장 권인숙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우원식 의원.

## 형사사법특위·정개특위·연금개혁특위 등 3개 특위 구성

이와 함께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명칭 등 변경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각각 상정해 의결했다.

기존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며 위원정수는 12명(여야 동수)으로 하고,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맡는다. 활동기한은 내년 1월 31일까지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정수는 17인(더불어민주당 8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맡는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정수는 13인(더불어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두 특위의 활동기한은 모두 내년 4월 30일까지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원 구성이 지체돼 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물가 상승과 코로나19 재확산 등 엄중한 대내외 상황에서 시급한 민생현안에 대응해 국회에서 조속히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매진해달라"고 여야에 당부했다.

# 제21대국회 후반기 의장단·상임위원장단 국립현충원 참배

7월 25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왼쪽에서 세번째)과 의장단, 상임위원장단이 참배를 마치고 걸어가고 있다.

제21대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이 원 구성 이후 첫 공식일정을 가졌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김영주·정진석 국회부의장, 상임위원장단은 7월 25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들에 참배했다.

## 김진표 국회의장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 드리는 국회 만들 것”

김 의장은 이날 방명록에 “순국선열들의 뜻을 받들어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을 드리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라고 남겼다.

# 김진표 국회의장,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김진표 국회의장(왼쪽)이 7월 28일 국회 접견실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7월 28일 국회접견실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는 물론 정부와 국회, 대통령과 야당 사이에도 튼튼한 다리를 놓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치솟는 물가와 가계부채, 환율상승,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민생과 경제의 어려움이 혹독하다"면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통해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여야가 함께하는 정치개혁특위, 연금개혁특위,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 민생경제안정특위를 통해 협력의 정치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또 "정부 외교와 별개로 국회 차원에서 활발한 통상외교를 전개하겠다"면서 "중국을 비롯해 정부가 충분히 감당하지 못하는 외교 공백이 있다면 국회가 앞장서 공백을 메우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질의응답시간에 기자들은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제21대 하반기 국회 운영 계획과 여소야대 상황에서의 협치 방안, 국회정상화, 예결특위 상설운영과 관련한 국회 예산 심의·의결권 강화 등에 대해 질문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정치 발상을 전환해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하자"며 "만약 요청이 있다면 대통령과 장관들을 야당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연결하는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 협력의 정치를 뿌리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신임 국회사무총장에 이광재 전 의원

7월 22일 열린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취임식

국회는 7월 22일 본회의에서 이광재 전 의원의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안을 가결했다.

이광재 신임 국회사무총장은 인사말에서 “300명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정책 세미나 활동이 국민에게 더 많이 전파되고 이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또한 앞으로 미·중 갈등이 우리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의원외교활동도 각별히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접견실에서 제35대 국회사무총장 취임식이 열렸다. 취임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취임식에서 이 총장은 국민이 신뢰하는 국회,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A·S국회’를 지향하겠다고 말했다. A·S국회는 △분노(Angry)를 미소(Smile)로 바꾸는 국회 △국민의 요구(Ask)에 해결책(Solution)을 제공하는 국회 △인공지능(AI)으로 스마트(Smart)하게 일하는 국회 △철저한 입법 애프터서비스(After Service)를 온라인상에서 구현하는 국회 △일류(Ace)이면서 동시에 배우는(Student) 국회라는 의미다.

이광재 신임 국회사무총장은 강원도 평창 출신으로 원주고·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제17·18·21대 국회의원, 제35대 강원도 도지사, 제21대국회 전반기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특집

# 누리호 발사 성공의 의미와 우주강국을 위한 국회의 지원방안

'누리호(KSLV-Ⅱ)'의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1t 이상의 실용위성을 쏘아 올리는 발사체 기술을 미국, 러시아, 유럽연합, 인도, 일본, 중국에 이어 세계 7번째로 확보했습니다. 정부는 "항공우주청을 설치해 항공우주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의 경과와 의미, 정부의 지원정책과 발전방향, 국회의 지원방안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편집자주>


**누리호 발사 성공까지의 경과**
진승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기획조정팀장

**우리의 힘으로, 인류를 이끌고, 우주로**
심채경 한국천문연구원 선임연구원

**대한민국의 우주 개발 이슈와 발전 방향**
허환일 충남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누리호 발사 이후 우주산업지원정책**
권현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누리호 발사와 국회의 대응**
박연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조사관

# 누리호 발사 성공까지의 경과

**진승보** 팀장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기획조정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 1993년 1단형 고체추진 과학로켓(KSR-I) 개발, 1998년 2단형 고체추진 과학로켓인 중형과학로켓(KSR-II) 개발에 성공했다. 또한 국내 최초 액체추진 과학로켓(KSR-III) 개발과 2번의 발사실패를 경험하고 마지막 3차 발사에 성공한 우리나라 최초 우주발사체인 소형위성 발사체(KSLV-I) 나로호 개발로 발사체 설계 및 제작능력을 확보했으며 전문인력 확보와 산·학·연 협동 연구 체제를 구축하는 등 우주발사체 개발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 개발을 위한 주요 과정 및 성과

한국형발사체 개발을 위해 우선 확보해야 할 기술은 액체엔진 기술이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엔진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설비가 없었기 때문에 시험설비 구축부터 진행했다. 2012년부터 나로우주센터 등에 본격적으로 시험설비 구축을 착수했고 2014년 연소기 연소시험설비, 터보펌프 실매질시험설비 등과 같은 구성품 시험설비를 확보했다. 2015년에는 엔진 시스템 차원에서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3단엔진 연소시험설비, 엔진 지상·고공 연소시험설비를 확보했고, 2017년에는 발사체 단 수준의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추진기관시스템 시험설비를 확보했다.

시험설비가 확보됐으니 우리가 개발한 엔진 구성품의 본격적인 성능시험이 시작됐다. 2014년부터 나로우주센터는 엔진구성품의 시험과 시험설비 구축이 병행되는 국내 유일의 추진기관 시험 단지로 변모해갔다. 엔진 구성품 시험 과정에서 연소불안정이 발생했고 설계 변경과 재시험을 통해 마침내 2016년 5월에 75톤급 엔진의 1.5초 연소시험에 성공했다. 이후 엔진 시험은 큰 무리 없이 진행돼 원하는 수준의 비행용 엔진을 확보할 수 있었다.

발사체 서브시스템 개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난제를 극복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추진제탱크 제작불량이었다. 추진제탱크는

발사체기체구조의 약 70~80%를 차지하는 탱크 중량이 발사체 성능과 직결되므로 경량화가 필수적인 반면 내압과 비행 하중을 견뎌야 하므로 높은 고강도와 고강성이 요구된다. 개발 초기 제작불량이 발생했고 약 1년 동안의 제작공정 재정립을 통해 추진제탱크 제작 기술을 온전히 우리 것으로 확보했다.

발사체 서브시스템 제작 이후에는 모든 구성품을 단별로 조립해 시험하는 체계모델 시험을 거치게 되는데 총 3단계의 개발절차를 확립했다. 엔지니어링 모델(EM), 인증모델(QM), 비행모델(FM) 순으로 총 3기를 제작했다.

같은 절차로 누리호의 2단부 검증을 가장 먼저 완료했는데, 누리호의 2단부가 바로 2018년 발사에 성공한 시험발사체다. 시험발사체는 75톤급 액체엔진의 성능검증을 위해 제작된 것으로 엔진성능 외에도 발사체 서브시스템 성능검증, 추적시스템 검증 등을 성공적으로 완료함으로써 누리호 개발의 성공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이후 2020년에는 3단 인증 완료, 2021년 3월에 누리호 1단 인증까지 완료했다. 1단 인증 완료로 단별개발 절차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발사준비에 돌입했는데 누리호 발사를 위해 신규로 구축한 제2발사대의 인증시험을 위해 3단형 발사체가 최초로 공개됐다.

제2발사대는 설계부터 제작, 조립까지 발사대 건립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국산화했고 기존 나로호 발사대(제1발사대)와는 달리, 지상에 엄빌리칼 타워(높이 45m)를 설치해 케로신, 산화제 등을 공급하게 되므로 발사체를 통한 인증시험이 필수적이었다. 이에 누리호 인증모델을 3단형 발사체로 조립해 발사대로 이송, 기립, 장착, 산화제 충전 및 배출 등 발사운용의 전과정을 수행했다.

2021년 10월 21일 누리호 1차 발사가 수행됐다. 오후 4시 발사예정이었던 누리호는 지상시스템 오류 조치로 1시간 늦어진 오후 5시에 발사하게 됐다. 1차 발사에서는 엔진점화, 이륙, 1단 분리, 2단 점화, 페어링 분리, 2단 분리, 3단 점화, 위성모사체 분리까지 모든 과정을 수행했으나 3단엔진의 조기 연소종료로 인해 위성모사체를 목표궤도에 투입하기 위한 속도인 7.5km/s에 도달하지 못해 궤도 안착에서는 성공하지 못했다. 이후 누리호 발사조사위원회를 통해 총 2천600여 개의 텔레메트리 데이터 정밀 분석 및 해석, 실험 등을 수행한 결과를 토대로 개선조치를 수행했다.

2022년 6월 15일로 결정된 누리호 2차 발사도 쉽게 진행되지는 않았다. 6월 14일 기상분석 결과 강풍으로 인한 작업 안전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어 발사일정이 6월 16일로 하루 연기됐다. 6월 16일 발사를 위해 하루 전인 15일에 발사체를 발사대로 이송해 점검하던 중 추진제 레벨측정 시스템의 오류가 발생돼 발사운용을 중지하고 조립동으로 회수해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발사 예비기간이었던 6월 23일 내에 발사가 가능함을 확인하고 기상예보 등을 고려해 6월 21일을 발사일로 재확정했다. 6월 20일 발사대로 이송된 누리호는 모든 점검과정을 이상없이 완료했고 발사 당일에도 발사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돼 오후 4시에 발사했으며 모든 발사과정을 완료한 후 오후 4시 14분 35초에 성능검증위성을 성공적으로 분리해 목표 궤도인 상공 700km에 안착시켰다. 이후 위성 교신까지 성공적으로 수행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마침내 우주발사체 기술을 확보했다.

# 우리의 힘으로, 인류를 이끌고, 우주로

**심채경** 선임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다정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의 카운트다운,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 맹렬하게 뿜어 나오는 연기, 지축을 박차고 솟구쳐 날아가 잠깐 사이에 아주 작은 점으로 보일 만큼 멀리 날아가는 로켓. 로켓 발사 장면은 언제 보아도 숨 쉬는 것을 잠시 잊을 만큼 강렬하고 인상적이다. 그 로켓이 우리나라 발사체일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누리호 발사가 성공했다. 1차 시험에서 발생했던 문제를 말끔히 손봤고, 발사 직전 발견한 오류를 슬기롭게 극복하며 예정했던 허용 기간 안에 발사를 성공시켰다. 다음 시험 발사에 대한 기대치를 다시 한번 크게 높였다. 몇 차례 더 남은 시험 발사를 모두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면 우리는 자력으로 만든 로켓을 제 영토에서 쏘아 올려 인공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안착시킬 수 있는 안정적인 기술을 확보하게 된다.

우리나라도 인공위성을 여러 차례 띄운 바 있다. 수십 년에 걸쳐 발전시키고 다듬어 온 인공위성 제작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이다. 그러나 이제껏 인공위성이 정해진 궤도에 가 닿기 위한 이동 수단은 부족했다. 외국의 발사체 기술과 전문 인력, 그리고 발사장을 빌려야 했다.

이제는 자력으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 지구를 관측할 수 있는 역량이 늘어났다. 우리 입맛에 맞게 설계한 인공위성을 우리가 원할 때 쏘아 올릴 수 있다. 민감하고 덩치가 큰 인공위성을 해외 발사장까지 수송하는 수고도 덜 수 있다. 성능이 좋고 효율적인 부품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다.

천문학, 우주 탐사에서 활용하는 부품과 기술 등은 군용 부품, 기술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미국의 국제무기거래규정에 따라 군용 물자, 기술, 용역 등에 대한 수출 절차 등이 제한되는데, 이 규정이 때로는 과학적 목적의 우주 임무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해외 발사체를 사용한다면 탐사선을 발사장으로 이동시키

기 위해 국경을 넘을 수밖에 없고, 안에 들어 있는 부품 중 국제무기거래규정에 적용되는 품목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 국경을 넘을 필요 없이 우리 발사체로 우리 발사장에서 탐사선을 우주로 보낼 수 있다면, 그럴 걱정 없이 오로지 필요에 따라 적절한 부품을 사용해 탐사선을 제작할 수 있다.

과학적 이득은 물론이고, 더 높이, 더 멀리 오르려는 도전 정신 외에도 우주 탐사로 얻을 수 있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얽히고설켜 있다. 자력으로 로켓을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은, 영토 안에 제대로 된 발사장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 정도는 너끈히 해낼 수 있는 과학 기술과 노련한 전문가를 확보하고 있다는 뜻이다.

게다가 로켓 발사라는 아찔하게 높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 정점에 가 닿을 때까지 과학적, 공학적 기반을 단단히 쌓아 올려야만 한다. 한 나라의 과학·기술의 수준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로켓 발사와 같은 우주 탐사 기술이다. 그러니 다른 어느 나라가 보아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관문을 통과했다는 국제 인증을 받은 셈이다.

우리나라는 이제 본격적인 우주 탐사의 출발선에 당당히 섰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국민의 지지에 힘입어 앞으로 보다 높이 날아오르고자 한다. 그런데 우주 탐사 선진국들에서는 이제 정부가 아니라 민간 기업에서도 우주 탐사에 뛰어들고 있다. 정부 주도의 우주 탐사도 이제 막 첫발을 딛는 우리로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러나 시작점에서의 후발 주자가 경주 내내 맨 마지막에 뒤처져 있기만 하라는 법은 없다. 누리호 개발에 정부출연연구소나 대학만 참여한 것은 아니다. 겉으로 크게 두드러져 보이지 않더라도 여러 업체가 다양한 형태로 참여했다. 볼트 하나, 너트 하나라도 납품한 업체, 우주 환경에서의 탐사선이 받을 영향력을 해석하는 데 참여한 업체, 관측 자료가 널리 쓰일 수 있도록 자료 공유 시스템 개발에 참여한 업체들도 있다.

이렇게 크고 작은 면에 차곡차곡 쌓인 '우주 경험'이 앞으로 더 먼 우주로 우리의 활동 영역을 확장하는 데에 꾸준히 이바지할 것이다. 그 과정을 몸소 겪으며 성장한 전문 인력의 역량이 모여 우리나라의 우주 시대에 다양한 면모를 부여할 것이다.

## 장기간 연구·개발 지원하는 실천계획 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먼 미래를 내다보는 비전과 장기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동시에 필요하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당초 2007년 발사를 목표로 했으나 다양한 난관을 맞닥뜨린 끝에 2021년에야 발사됐다.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보내며 꾸준히 지원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책임자를 끌어내리고 프로젝트를 중단시키는 대신 실패와 오류를 해결하고 극복할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전담 부처가 장기적인 과학·기술적 가치 고양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마침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인류에게 새로운 우주를 발견하는 큰 선물을 보내오고 있다.

지금 누리호의 역량은 지구 저궤도에 인공위성을 띄우는 것이지만, 앞으로는 더 먼 우주로 나아가서 지구가 아닌 다른 천체를 관측할 역량까지 갖출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 대한민국의 우주 개발 이슈와 발전 방향

**허환일** 교수
충남대 항공우주공학과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은 사전적 의미보다는 우주개발진흥법상 우주 물체의 제작·발사 등에 대한 기술·연구개발, 이를 활용한 우주 공간 이용 및 탐사와 관련한 제반 활동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한 모든 활동을 '우주활동(space activities)'으로 사용하면 될 것이다.

제3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2018.2.)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논리는 '안전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매우 밀접함을 알 수 있다. 우주 개발은 국가 안위(National Security, 국가안전보장)에 필수 불가결한 요인이며 경제, 국방, 외교, 환경, 통신, 보건, 해양, 기상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개념이다. 여기서 우주개발의 주요한 두 축은 우주 경제와 우주 안보라 할 수 있다.

2020년대에는 세계적으로 우주개발국이 약 30개국에서 85개국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민간이 우주 비즈니스를 주도하는 방향으로 세계 우주 개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주 개발은 우주 경제, 즉 경제적 측면에서도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우주 관광, 우주 광산 채굴, 우주 거주지 건설, 우주 태양광 에너지, 모두를 위한 인터넷 서비스 등 상업 가능성에 기반한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해지는 뉴스페이스 시대가 활짝 열리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변화와 흐름은 우주 개발의 시작이 늦었던 우리에게 기회이자 위기가 될 수도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우주 개발은 새롭게 안보적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부각됐다.

그동안 우주 공간은 암묵적으로 국가안보의 핵심 공간으로 활용돼 왔다. 이미 우주 선진국은 작전의 입안부터 지휘 통제, 실제 교전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국면에서 우주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지구관측위성과 위성 영상 정보를 활용해 상대방의 위치와 상황을 파악하고, 미사일 유도와 무인항공기 관제에 위성·감시정찰 위성을 사용하며, 조기경계경보 위성, 통신위성 등 다양한 우주

자산이 국가안보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 간 우주 안보 구축을 위한 협력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우주 경제와 우주 안보 영역이 교차하는 공통 영역에는 SSA와 STM이 있다. SSA는 Space Situational Awareness(우주상황인식)를 의미하며 우주쓰레기, 우주물체 낙하 등과 관련이 있다. STM은 Space Transportation Management(우주수송관리)이며 우주관광 시대에 필요한 제도와 관련이 있어, 국토교통부에서 이와 관련한 업무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과 불안정성이 심화되며 사실상 신냉전시대가 도래해 미국의 대 중국 압박도 격화되고 있다. 우주 개발에서도 이러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미국과 중국의 우주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서방 세계 국가를 중심으로 아르테미스 협정을 이끌면서 달 개발과 심우주 개발에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에 중국은 러시아와 힘을 합쳐 미국 반대편에서의 우주 개발 국가들을 규합해 또 다른 우주 개발 세력을 결집하고 있는 실정이다.

## 우주 개발 전담하는 컨트롤 타워 설립 시급

우리나라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지속가능한 우주개발의 추진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속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심으로 축적된 우주 기술을 적극적으로 산업체로 이전하고, 민간에서도 우주에 과감한 투자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역량과 의지가 갖춰진 강한 기업 육성이 필요하다. 우주산업에서 정부는 수요자이자 공급자다. 기업에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그에 적합한 정책 지원을 동시에 제공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의 장기적인 투자와 지원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우주 기술 수준은 7위 수준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 예산은 일본의 1/5 수준에 불과하다. 추격형 후발주자로서 과감하게 우주 개발 예산을 JAXA(일본의 NASA) 수준인 연간 2조 원 수준으로 3배 이상 증액해 우주 개발을 도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2021년 한·미미사일지침 해제 이후에 우주 안보에 대한 여러 계획이 봇물처럼 터져 나와 다각도로 전개되고 있다. 얼핏 우주 분야가 대폭 확장되어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 보이지만 정부 부처 간 이기주의와 예산 칸막이라는 부작용이 예상되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다. 사공은 많은데 선장이 보이지 않는 형국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국방부 등 개별 부처를 뛰어 넘어 민간과 국방 우주 개발을 총괄하는 독립된 우주 전담 컨트롤 타워(상설 조직/기구)를 설립해 일관성 있고 예측가능한 우주 개발 정책 수립 및 집행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과학기술 발전은 국가 지도자의 관심을 먹고 자란다. 국회를 비롯한 국가지도자의 우주에 대한 관심이 우주 전담조직 설립, 정책 및 예산 지원으로 발현되기를 바란다. 시간은 곧 기회다.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킨 지금이 천재일우의 좋은 기회다. 우주개발을 통해서 차세대 먹거리를 확보하고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으로 보답하자.

# 누리호 발사 이후 우주산업지원 정책

**권현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0년 3월부터 13년간 1조 9천572억 원을 투자해 개발한 우리나라 순수 독자 기술의 우주발사체, 누리호가 마침내 지난 6월 21일 발사에 성공해 대한민국 우주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우주발사체 기술은 국가전략기술로서 국가 간 기술이전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세계적으로도 실용급(1톤급 이상) 위성을 지구저궤도에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국가는 러시아,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인도 등 6개국 정도로 매우 제한적이다. 이번 누리호 발사 성공은 대한민국이 실용급 위성 발사가 가능한 7번째 국가로서 우주개발 선진국으로 첫발을 내딛는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실용급 위성 발사국가가 된다는 것은 우리 위성을 우리 발사체로 우리 땅에서 발사할 수 있는 자주적인 우주개발 역량을 모두 갖추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누리호가 성공했다고 해서 미국과 같은 우주선진국과 바로 경쟁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2020년 현재 우리나라의 우주산업 매출액은 2조 7천820억 원으로 전 세계 매출액 297조 원(2천703억 달러)의 0.86% 수준이며, 우주산업에 참여하는 389개 기업 중 65.6%(255개)가 우주 분야 매출액이 10억 원 미만인 상황이다.

## 민간의 자생적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하고 우주신산업 육성할 것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지난 7월 6일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우주산업 도약을 위한 '우주경제 비전선포식'을 개최했으며,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우주경제 시대를 열기 위해 과감한 투자와 기술 이전, 우주활용·서비스 산업 확대 등을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경제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우주산업 지원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발사체·위성 등 공공부문 기술의 민간 이전,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산업단지 조성 및 인력 양성 등의 기반 조

성을 통한 '민간의 자생적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이다. 발사체의 경우 올해 하반기 체계종합기업을 선정해 누리호의 기술을 이전해 설계·제작·발사의 전주기 운용이 가능한 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며, 위성의 경우 차세대 중형위성사업을 통해 진행중인 기술이전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참여 확대를 위해 우주개발사업으로 기업이 매출과 이윤 창출이 가능하도록 계약 방식을 도입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연말까지 완료하고, 우주산업 집적단지인 발사체, 위성 특화지구를 지정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추진하며, 우주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5개 대학을 미래우주교육센터로 지정해 올해부터 5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우주시장 확대를 위해 위성정보산업과 위성항법 서비스 산업 등 우주활용·서비스 관련 '우주신산업 육성'이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위성영상정보의 영향력을 깨닫는 계기가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상하고 있는 위성정보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안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가칭)'위성정보활용촉진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을 추진해 향후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등 위치기반서비스(LBS) 산업 발전을 위한 토대를 구축할 예정이다.

셋째, 달 탐사 등 무인 우주 탐사를 본격 추진해 '대한민국 우주개발 영역'을 확장할 것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인 '다누리'가 우리 시간 기준 8월 3일 8시 24분 미국 플로리다에서 '스페이스X'사의 팔콘9 발사체로 발사될 예정이다. 다누리는 12월 달 궤도에 진입해 1년간 달 상공을 공전하며 달 착륙 후보지 탐색, 달의 자기장·감마선 측정 등의 과학 연구, 우주인터넷 기술 검증 등을 수행한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달 착륙선을 자력으로 발사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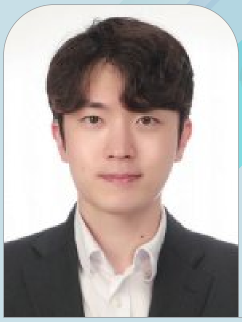
한편, 장기적으로는 누리호를 통한 독자 우주수송력을 기반한 유인우주탐사를 추진하고, 유한한 지구 공간을 넘어 우주 공간의 무한한 자원을 채굴하며, 지속가능한 인류의 생존·인류의 활동영역 확대를 위한 현지자원활용체계(ISRU, In-Situ Resource Utilization)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우주의학 분야까지 우주산업의 영역을 다방면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나갈 것이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 우주선진국들은 미래 경제와 안보의 새로운 영역인 우주에서의 패권경쟁을 시작했으며, 인도, 아랍에미리트(UAE), 룩셈부르크 등은 우주 신흥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태국, 인도네시아와 같은 동남아시아와 멕시코, 브라질 등 중남미 국가들도 우주산업 분야에 뛰어들고 있다.

우리나라도 누리호의 성공으로 우주산업 경쟁에 뛰어들 수 있는 기초체력을 갖추게 됐다. 하지만 우주경제를 둘러싼 무한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의 행정적·기술적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지속적인 첨단 우주기술 개발과 민간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회의 재정·입법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이 필요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누리호 성공으로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을 알렸듯 우주 강국 도약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나갈 것이다.

# 누리호 발사와 국회의 대응



**박연수** 입법조사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지난 6월 21일 누리호 2차 발사가 성공했다. 1단 엔진을 러시아에서 직도입해 공동개발했던 나로호와 달리, 누리호 개발은 발사체 주요 구성품의 제작·시험 및 발사 운영 등 전반적 과정이 대한민국 기술로 추진됐다. 이번 발사 성공은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우주운송 기술 능력을 확보하고, 자주적인 우주개발 역량을 갖추게 되었음을 시사한다.

우주 공간의 상업적 활용을 위한 경쟁이 가속화되고 우주 분야가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 측면에서 차지하고 있는 전략적 가치가 점차 커지고 있지만, 아직 국내 우주산업 시장 규모는 전 세계 시장 대비 1% 수준에 불과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번 누리호 개발 성공으로 확보한 발사체 기술 역량을 민간 부문으로 적절히 이전해 후속 연계 사업을 추진하는 등, 우주개발 분야에 기업 참여를 확대하고, 보다 체계적인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국회가 기울인 입법적 노력 및 성과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 우주산업 진흥 제도·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 의결

먼저 민간 우주개발 촉진과 우주산업 진흥을 제도·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큰 폭의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을 지난 5월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오는 12월 시행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했다. '위성체 제작, 발사체 제작, 지상장비, 우주탐사' 등 개별 우주산업 분야를 융·복합할 뿐 아니라 관련 산업의 연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연구기관 등과 그 지원시설을 묶어 우주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한 연구기관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민간 우주개발 촉진과 우주개발사업 추진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했다. 대표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한 우주개발 기반시설을 우주사업자에게 개방·활용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와 협약을 맺어 우주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사업의 일부를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위탁 규정을 두어 우주개발 관련 민간업체의 참여가 활성화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셋째, 우주 신기술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했다. 우주기술 중 국내에서 신규·진보성 등이 있다고 인정되고 그 기술을 보급·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을 우주 신기술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우주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우선해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했다.

## 항공우주청 신설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항공우주청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계류 중

다음으로 대통령 소속 우주청(혹은 항공우주청)을 신설하기 위한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이에 따른 수반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안('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 '항공우주청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계류 중이다. 현재 국내 우주개발 정책의 최고 심의기구로 국가우주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위 법률안들은 현행 국가우주위원회가 비상설회의체로서 여러 부처의 참여가 제한되며 부처 간 조율 및 연구성과물 공유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하에, 우주 전담조직을 설치해 우주정책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제고하고 보다 통합적인 관점에서 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

향후 법률안 심사와 구체적 정책 논의 과정에서 조직형태 및 소속, 우주개발 분야와 항공산업 분야 간 분리 여부, 청사 위치 등 여러 쟁점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상업적 우주물체 발사와 인공위성 운용 등의 증가로 우주손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해,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시효를 연장하기 위한 취지의 '우주손해배상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우주손해를 안 날부터 3년(현행 1년), 우주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현행 3년)으로 행사 시효를 확대하고, 신체 상해·질병 발생 및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30년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누리호의 성공에 이어 오는 8월 3일에는 대한민국 최초 달 탐사선인 '다누리'가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발사될 예정이다. 다누리는 2030년대 초 발사가 목표인 달 착륙선의 착륙지 선정을 위해 달 궤도에 진입해 고해상도 표면 영상 촬영, 지질 및 자원 탐사 등의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국내 우주개발 연구진과 관련 산업 종사자의 장기간에 걸친 노력이 조금씩 빛을 보기 시작한 만큼, 향후에도 국회는 우주개발을 촉진하고 우주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입법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설 것”

**서영교** 소상공인정책포럼 대표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중랑구갑)

**Q. 대한민국 국회 우수연구단체 대상을 수상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수상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우수연구단체 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도 묵묵히 생업에 종사하고 계신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포럼’이 그분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주변 환경에 맞춰 합리적인 대안을 정책에 반영하고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이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정책포럼이 앞장서겠습니다.

**Q. 소상공인정책포럼은 어떤 의원 연구단체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소상공인을 비롯한 경제인들에게 공정한 시장 환경을 보장하고, 사업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지원방안과 복지향상 정책 등을 연구하며 국가 정책과 연계를 통해 경제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의원 연구단체입니다.

## Q. 그간 해오신 주요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A. 코로나19로 많은 자영업·소상공인들이 타격을 받았으며, 폐업 및 휴업 등 실질적인 경제활동이 멈출 정도로 생업에 지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을 비롯한 경제인들에 대한 지원 및 정책개발을 연구하고자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 토론회, 간담회를 실시했으며, 현지를 직접 방문해 간담회 및 출장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설문조사와 연구용역 보고서 작성을 통해 정책적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입법 활동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제로페이 출범 2년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간편결제 산업의 미래를 조망함으로써 위드코로나 시대 소상공인 생존전략으로서 디지털화' 세미나, '지역화폐 골목상권 살리기 운동본부 발족식, 지역사랑상품권 경제적 효과 분석 및 제도 장착' 토론회, '골목형 상점가 지원을 위한 의견 청취' 세미나 등을 각각 실시했습니다.

또한, 4차례의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수도권 영업제한 완화, 지방세 감면, 본점과 분점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간담회, '소상공인 범위 확대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및 소상공인 대출 지원방안 강화' 간담회,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를 통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위기 극복, 사업장 영업제한의 탄력적 운영' 간담회, '소상공인 매출 빅데이터를 통한 코로나19 피해 분석'을 주제로 한 발표회를 각각 개최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단체 워크숍' 참여와 '가락시장 수산유통인과의 긴급간담회' 등 현지 출장조사도 실시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지원여부, 지원방식, 지역화폐 지급 여부 등을 묻는 재난지원금 관련 여론조사도 실시했습니다. 소상공인 피해를 매출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정책으로 활용하기 위해 '코로나19와 소상공인의 삶: 2020년 소상공인 매출 빅데이터를 통한 코로나19 피해분석' 연구용역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작년 한 해에만 소상공인정책과 관련한 법안 총 9개를 발의했고, 이중 7개 법안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등 구제에 관한 특별법', '국민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등의 제정안 및 전부 개정안을 비롯해 '소상공인기본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2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한국중소기업유통공사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은 현재 계류중입니다.

## Q. 후반기 국회에서 '소상공인정책포럼'이 어떤 활동을 하실지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A. 지역사랑 상품권의 효과와 확대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소상공인 경제활동과 관련해 현장에서의 대화를 통한 의견을 계속 청취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정책 우수사례를 선정해 확대 방안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의 간담회 및 토론회를 개최해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글 박민선

# 글로벌 관광레저·해양바이오 산업 중심 꿈꾸는 충남 보령·서천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충남 보령시서천군)

**뜨거운 햇볕과 습한 공기로 여름 기세가 나날이 더해가던 7월. 소나기로 더위가 잠시 주춤하던 날 충남 보령·서천에서 장동혁 의원을 만났다. 6월 재보궐 선거에서 국회 입성에 성공한 장 의원은 당선 후 두 달째 지역에 상주하다시피 하며 지역민들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었다. 태양이 열기를 더해갈수록 더 뜨겁고 더 신나는 젊음 가득한 보령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될 정도로 다양한 생물자원을 보유한 갯벌의 고장 서천에서 장동혁 의원의 지역자랑과 의정활동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5년 준비 끝에 막 올리는 ‘2022 보령 해양머드박람회’

대천해수욕장이 있는 보령은 7월 16일 개막하는 ‘2022 보령 해양머드박람회’ 준비로 분주했다. ‘해양의 재발견, 머드의 미래 가치’를 주제로 8월 15일까지 이어지는 이 행사는 충청남도와 보령시가 2017년부터 5년의 준비 끝에 드디어 막을 올리게 됐다.

장동혁 의원은 일행을 박람회장으로 안내하며 “박람회는 대천해수욕장 인근 7만3천430㎡ 부지에 해양과 머드에 담긴 인류와 생명의 이야기를 7개의 전시관으로 구성했다”며 “매년 해오던 머드축제를 좀 더 발전시키고 규모를 키워 해양과 머드를 활용한 해양·머드 산업의 미래를 가늠해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장 의원은 머드의 미래가치와 비전을 보여주는 해양머드주제관, 머드 테라피 체험, 아토피 치유 등을 체험해볼 수 있는 해양머드웰니스관, 머드 페이스마스크, 머드 도자기 만들기, 머드 비누 만들기 등으로 구성된 해양머드 체험관, 해양 레저 및 관광산업을 홍보하는 해양레저&관

충남 보령 대천해수욕장에서

광관, 머드와 해양의 무한 가치를 보여주는 해양머드 영상관, 도내 우수 농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특산품 홍보관 등을 돌아보며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박람회장 인근 대천해수욕장에서는 박람회와 같은 기간에 열리는 '제25회 보령머드축제' 준비가 한창이었다. 젊은이들과 외국인 관광객 등 해마다 120만 명 이상이 찾는 보령 머드축제는 머드팩을 즐기며 열정을 발산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여름축제로 자리잡았다.

"충남도와 보령시는 머드축제 성공을 발판으로 머드산업을 비롯해 해양자원을 활용한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이번 박람회를 준비했습니다. 축제가 결합된 머드박람회를 통해 보령이 글로벌 레저관광도시로 우뚝 서는 동시에 해양신산업과 미래 건강산업의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올여름 대천해수욕장에서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진흙 목욕과 해수욕으로 치유해 보시길 바랍니다."

## 보령해저터널 개통으로 관광산업 새로운 전기 맞아

지난해 개통한 보령해저터널은 충남 보령시 대천항

'2022 보령 해양머드박람회' 전시관 입구에서

과 오천면 원산도를 잇는 국내 최장 해저터널로 길이가 6천927m에 이른다.

"보령해저터널을 나와 원산도를 가로지르면 원산안면대교를 통해 태안군 영목항까지 곧장 갈 수 있습니다. 보령해저터널 개통으로 국도 77호선 보령~태안 전 구간의 차량 운행이 가능해졌고 이동시간도 기존 90분에서 10분으로 단축됐습니다."

장동혁 의원은 이날 보령해저터널 홍보관을 찾아 터널 건설과정과 현황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난해 보령해저터널이 개통된 후 보령의 관광산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원산도에 서해안 최대 규모 해양관광 리조트가 내년 착공될 예정이고 원산도와 인접한 4개 섬을 예술, 치유, 청춘, 가족문화 등의 테마로 개발해 휴양 명소로 만들 계획입니다. 보령이 글로벌 해양관광 명소로 거듭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 '해양 바이오 클러스터'로 도약 준비하는 서천

서천에 위치한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연구·전시·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다. 이 중 전시·교육 시설인 '씨큐리움'은 바다+질문+공간을 뜻하는 합성어로 바다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며 해답을 찾아가는 전시·교육의 공간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 씨큐리움에는 7천 점 이상의 다양한 해양생물 표본이 상설 전시되어 있고 이외에 실내 체험 및 놀이 공간인 어린이체험전시실, 4D영상상영실, 기획전시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시관 입구에 5천200개의 해양표본을 탑처럼 쌓아올린 '씨드뱅크'는 이곳의 상징물이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인근에 한국폴리텍대학 해양수산캠퍼스가 건립될 예정입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과 협력해 기존 폴리텍대학과는 차별화된 전국 유일의 생태·해양수산 분야 지역 특성화 대학으로 만들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씨드뱅크 앞에서

동백정

계획입니다. 또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에 해양 바이오 특화단지까지 조성해 산·학·연 네트워크가 구축되면 서천은 미래 먹거리인 해양 신산업 분야의 '해양 바이오 클러스터'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량리 동백나무숲은 500년 수령의 동백나무 80여 그루가 군락을 이루며 자라고 있는데, 동백꽃이 피는 3월부터 5월까지는 관광객들로 발디딜 틈이 없다. 동백나무숲의 명소는 숲 언덕마루에 세워진 동백정이다.

"동백정에서 바라보는 서해바다는 동백나무숲 앞바다의 오력도와 어우러져 빼어난 풍광을 자랑합니다. 아름다운 일몰의 적기인 12월 말부터 다음 해 1월 말까지는 많은 사진작가들이 이곳을 찾습니다."

## "입법과 예산으로 지역 현안 해결할 것"

장동혁 의원은 "국립생태원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동백나무숲과 우리나라 최고의 갯벌 등 서천은 다양한 볼거리를 가지고 있지만 접근성이 떨어지고 숙박시설이 부족한 것이 아쉽다"며 "국회에서 입법과 예산으로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 싶다"고 말했다.

대학 4학년 때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교육부에서 7년간 근무한 장 의원은 다시 사법고시에 도전해 16년간 법조인으로 활동했다. 그는 판사 시절 국회 파견 경험도 있어 입법과 사법, 행정을 모두 경험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장 의원은 "충남 보령이나 서천 같은 지방의 가장 큰 문제는 인구 감소"라며 "지역균형발전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이 살려면 기업과 인재들이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데, 보령·서천은 접근성이 떨어지고 교육이나 문화 인프라도 많이 부족하다"며 "장항선 복선전철 조기 완공 등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기업하기 쉬운 환경 마련에 집중하면서, 해양관광과 생태관광 브랜드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공무원과 법조인을 거쳐 국회의원이 되기까지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빈부갈등으로 인한 편 가르기가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어가는 이 시대에 대한민국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정치라는 큰 방향을 향해 매순간 최선을 다해 제 할 일을 하겠습니다."

충남 보령·서천: **글** 김현아 **사진** 유윤기

# ‘고달프고 힘든 자기성찰이 없는 한 삶의 질은 절대로 좋아질 수 없다’

**윤영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 동구남구갑)

**‘고달프고 힘든 자기성찰이 없는 한 삶의 질은 절대로 좋아질 수 없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국회 입성에 성공한 윤영덕 의원의 좌우명이다. 조선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학생운동에 몸담았던 그는 공부를 더 하고 싶어 대학원에 진학했고 이후 중국으로 유학을 다녀온 뒤 대학 강단에서 강의를 하며 시민단체에서 활동했다. 윤영덕 의원을 만나 그의 인생 좌우명과 의정활동 이야기를 들었다.**

“유학을 다녀와서 40대를 앞두고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던 중 우연히 지리산 실상사 주지스님이셨던 도법스님의 ‘고달프고 힘든 자기성찰이 없는 한 삶의 질은 절대로 좋아질 수 없다’는 글귀를 접하고 그 말씀이 확 와닿았습니다. 내가 꿈꾸는 개인의 인생, 또는 내가 꿈꾸는 사회나 세상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자기성찰의 과정에서 찾아지고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됐습니다.”

윤영덕 의원은 “끊임없는 성찰은 항상 제 자신의 부족함을 일깨워주면서 어떤 부분에서 더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한다”며 “특히 정치를 하게 되면서 자기성찰은 개인의 삶에 대한 문제를 넘어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도 현재를 끊임없이 되돌아보고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더 오랫동안 가지고 가야할 것은 무엇인지 늘 성찰하지 않으면 개인이나 공동체가 만족할 수 있는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내기 어렵습니다. 특히 요즘 민주당에 대해 당원이나 국민은 새로운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낡은 것이 무엇인지 확인되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 힘듭니다. 그래서 개인뿐만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소명을 다하기 위해 일상적인 성찰이 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북경대에서 국제정치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고 귀국한 윤 의원은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 참여자치21 지

방자치위원장, 광주YMCA이사,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 운영위원 등을 맡아 활동했다. 윤 의원은 "그 중에서도 특히 '시민모임'을 통해 스스로를 더욱 되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은 태평양전쟁 말기 10대 초중반의 어린 나이에 일제에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입니다. 임금도 받지 못하며 강제노역에 시달렸고, 특히 해방 후 고국에 돌아와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오인받아 정신적 고통을 겪는 등 이중 피해를 겪어 왔습니다. '시민모임'은 제국주의 침략 전쟁의 희생양이 된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할머니들의 명예회복과 인권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2009년 발족된 단체입니다."

'시민모임' 발족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광주에 미쓰비시 자동차전시장이 문을 열었다. '시민모임'에서는 사죄도 배상도 하지 않은 전범기업이 광주에 전시장을 연 것에 분노하며 전시장 폐쇄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시작했다. 그러자 직장인과 학생 등 많은 시민이 1인시위에 동참했고, 결국 200여 일만에 전시장은 문을 닫았다. 그 후 '시민모임'은 미쓰비시에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10만 명 서명운동도 시작했다. 서명과 함께 피해할머니들을 돕기 위해 1천 원 기부 운동도 벌였는데 거의 13만 명이 참여해 2억 원 가까운 돈이 모였다.

### "평범하고 성실한 사람들의 스피커 될 것"

"'시민모임' 활동을 하면서 평범한 사람들의 작은 실천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끊임없는 자기성찰을 통해 모든 사회구성원이 자신의 역할을 찾아서 하면 이것이 우리 공동체를 한 걸음 더 전진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시위에 참여하고 기부를 하는 시민들을 보면서 큰 감동을 느꼈고 다시금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제19대 대선이 실시되면서 윤영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지역 공약 개발을 담당하게 됐고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국정운영 경험을 쌓았다. 그러다 시민의 목소리를 정치 영역에 보다 잘 반영하는 역할을 해 보자는 생각에서 정치를 결심했다.

국회 입성 후 그는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것을 보람 있는 입법 활동으로 꼽았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근로정신대 피해할머니들을 지원하고 있었지만 조례가 없는 지역에서는 아무런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챙겨야겠다는 생각에 지난해 8월 여야 의원 118명과 함께 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아직 심사가 진행되지 않아 아쉽습니다."

채용비리가 끊이지 않는 사립학교의 투명하고 공정한 교원 채용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다.

윤영덕 의원은 "그동안 정치는 목소리 큰 사람의 이야기에만 귀 기울이고 그분들을 중심으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서민이나 장애인, 아동과 청소년 등 평범한 사람들의 스피커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남은 2년 동안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자신의 존재가치를 소중하게 평가받고, 그분들의 이야기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제대로 반영돼 대한민국이 모든 구성원들의 공동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글** 김현아 **사진** 김지범

# “현장에서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민생정치입니다”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울산광역시 중구)

**양기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광명시을)

**국회보 8월호 ‘칭찬합시다’의 주인공은 박성민 의원이다. 그를 추천한 양기대 의원은 “재선급 초선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뛰어난 역량과 뚝심을 가진 정치인”이라면서 “통하는 게 많아 여야 합치를 함께 이끌어내고 싶은 분”이라고 소개했다. 이에 박성민 의원은 “임기 동안 300명 의원 전부 칭찬받는 일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주 한잔이라도 사드리고 싶다”며 웃었다. 그는 “양 의원님 말씀대로 친화력과 뚝심을 잘 살려 야당 의원들과 불필요한 정쟁은 지양하고 협치하며 국민께 신뢰받는 정치를 만들겠다”고 답했다.**

울산 구의원과 제5,6대 울산 중구청장을 역임한 박성민 의원은 2020년 제21대국회에 입성했다. 중구청장 재직시절 항상 현장을 누비며 ‘친화력 좋은 일벌레’라는 별명이 붙었던 그는 스스로 ‘사람 좋아하는 골목대장’이라고 말했다.

“생각해 보면 어린시절부터 정치인 기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 이전부터 몇 살 많은 형들, 친구들을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골목대장 역할을 했어요. 학교 다닐 때도 임원, 간부를 도맡아 했고 방과 후에는 여러 봉사단체에서 회장도 했었죠. 돌이켜보면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 남을 도와줘야 마음이 편한 게 천성

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폐지를 줍거나 길을 찾는 어르신이 눈에 띄면 그냥 지나치질 못한다면서 얼마 전에도 한 철도역에서 만난 어르신을 도와드리다 막차를 겨우 탔다는 일화도 전했다.

“의정활동이라고 다를 게 있을까요. 서민과 약자의 편에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도구가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소신과 초심으로 정치에 임하고 있죠.”

박성민 의원은 당 조직부총장에 이어 지난 대선에서 선대위 조직본부장을 맡았다. 임명된 배경에는 조직운영과 관리에 있어 경험이 풍부한 박 의원이 적임자라는 평가가 크게 작용했다.

박 의원은 지난 3월 10일 새벽, 대선 승리를 확정지었을 때를 ‘정치 인생에서 가장 뜻깊은 날’이라고 표현했다. 오직 정권 교체라는 목적을 위해 전국 200여 곳을 돌며 열심히 발로 뛰었던 기억을 떠올렸다.

“현재 국회의 여소야대 상황과 팬데믹, 기후위기, 양극화와 세계적인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국제질서의 변화로 야기된 공급망 위기와 자원 및 에너지 위기 등이 무서운 기세로 닥쳐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앞에 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이번 정부가 내세웠던 정책을 다시 살펴보고 합리적으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한국경제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해야겠지요.”

## 현장의 목소리 듣는 ‘소통의 날’

매달 첫 번째 토요일, 울산 중구 학산동에 위치한 박성민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서는 지역구민의 민원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의 날’ 행사가 열린다. 참석하는 지역구민들은 지역 재개발·재건축, 국가유공자 가족 지원 강화 등 다양한 지역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박성민 의원은 “구청장 재직시절부터 항상 현장을 찾아가서 행동하는 행정을 펼쳤다”며 “지역구민의 의견을 중앙에도 잘 전달하고 정부와 지자체 등과 협의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울산은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이끈 산업도시지만,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 등으로 큰 변화에 직면해 있는 만큼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이 필요합니다. ‘수소’와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고 청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한 울산은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도시철도가 없습니다. 도시 규모에 걸맞게 교통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한데 전반기에 국토교통위에서 울산 도시철도(트램) 2호선 건설 사업과 저의 1호 공약인 제2명촌교 건설사업이 예타 대상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하반기에도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해 각별히 신경 쓸 것입니다.”

**김영배 의원을 칭찬합니다**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성북구 갑)은 전국 최연소 구청장 비서실장으로 정계에 발을 들여 국회의원 보좌관과 청와대 행정관, 구청장 등 요직을 두루 경험한 정치 베테랑입니다. 평소 지켜보면서 느낀 따뜻한 성품과 합리적으로 현안을 해결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민생을 위해 어느 때보다 여야 협치가 중요한 만큼 김 의원님과 함께 민생과 균형발전에 힘쓰고 싶습니다.”

**글** 윤성혜 **사진** 임진완

# “사회 불평등과 격차 줄이는 정치하고 싶어”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을)

**기업 인수·합병 전문 변호사, 서울대와 하버드대 로스쿨 졸업 등 화려한 이력을 자랑하는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에 자진 입당했고 제21대 총선에서는 험지 ‘서울특별시 강남구병’에 출마했다가 고배를 마셨다. 이후 6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무비서관으로 파격 발탁돼 국정운영을 보좌했다. 1년간의 청와대 생활을 마치고 지난 6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당선돼 국회에 입성한 김한규 의원을 만났다.**

김한규 의원의 집안은 23대째 제주에서 산 제주 토박이다. 김 의원은 “아버님이 학창 시절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시고 직업을 갖고 계시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셨다”며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여섯 살 때 제주로 돌아가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제주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3남매 가운데 장남이었던 그는 “학교 끝나고 친구들과 바닷가에서 물놀이하던 평범한 제주 소년이었다”며 웃었다. 부친은 이비인후과 의사였다. 1층이 병원, 2층이 집이었다고 한다. 그는 “밤이면 목에 생선 가시가 걸린 주

민들이 찾아와 문을 두드리는 일이 다반사였다"고 했다.

"고등학교 때부터 주어진 환경에 따라 출발선이 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소위 좋은 대학에 가서 안정적인 직업을 얻을 수 있었지요. 아버지께서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으셔서 저도 자연스럽게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고교 시절부터 정치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했던 것도 그런 맥락에서였지요."

서울대 졸업 후 김 의원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16년간 자문변호사로 일했다. 그는 "IMF 이후 우리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구조조정, 기업 인수합병 등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경제를 다시 살리는 데 집중하던 시기였다"며 "그런 도전을 해보고 싶어 변호사가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과거 인수·합병 대상이었던 우리나라 기업이 27개의 자회사를 거느린 글로벌 기업을 인수했던 일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그는 "짧은 출장일 줄 알고 반팔 입고 갔다가 코트 입고 귀국했다"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에 온라인 입당, 청와대 정무비서관 거쳐

김 의원은 보수정당에서 영입 제안을 받았지만 고심 끝에 고사하고 지난 2018년 더불어민주당에 온라인 입당했다. 오래 꿈꾸던 '정치'를 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우리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 내지는 어떤 분야, 어떤 어젠다에 더 집중해야 할지 생각해보니 더불어민주당이 제게 가장 잘 맞는다고 생각했다"며 "저로서는 가장 자연스럽고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입당 이후 박원순 서울시장 캠프 등에서 일했으며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으로도 활동했다.

그는 제21대 총선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병' 지역구에 도전해 주목을 받았다. 김 의원은 "낙선될 걸 알았지만 제가 선택한 당에서 공천을 받아 후보로 나가는 것은 마치 당이 저를 인정해주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총선이 끝난 후 자신이 패배한 원인을 자세히 분석한 영상을 올렸고 지지층 사이에서 큰 호평을 받았다. 그러던 그에게 흔치 않은 기회가 찾아왔다. 2021년 6월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임명된 것. 정치 신인에 가까운 그의 임명은 파격적이었다.

"지금도 누가 저를 추천해준 건지 모르겠어요. 정무비서관이라 특정분야를 전문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현안에 대해 검토할 기회가 있었어요. 1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배우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근무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접전 끝에 당선됐다. 김 의원은 "법을 전공하기는 했지만 변호사로서 기업들과 많이 일해서 그런지 경제 분야에 관심이 많다"며 "경제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일하고 싶다"고 말한다.

"제주도에서 일하다 보니 당장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문제, 교육에서의 격차도 크게 느껴집니다. 대기업이 많은 서울과 비교하면 지방은 대부분 소상공인 내지 중소기업이 많아요. 사회 전반에 걸쳐 불합리한 불평등을 최소화하고 격차를 완화해가는 것이 제 정치적 목표입니다. 제21대국회뿐 아니라 정치를 하는 동안 제가 계속 관심을 갖고 싶은 부분이고요. 격차가 아예 없어질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격차를 줄여나가 사회구성원 간 갈등을 줄여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려면 불평등과 격차를 줄이는 것이 모두를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글** 박민선 **사진** 김진원

# ‘플랫폼 노동’ 등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험체계 정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법’ 개정

**고상근** 수석전문위원
전 환경노동위원회(현 정무위원회)

근로자와 유사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비전형적 고용형태를 가지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문제는 환경노동위원회의 중요한 입법 쟁점 중 하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2007년에 사회적 논의를 거쳐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는 아니지만,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해 이들을 산재보험의 보호 대상으로 포함했다. 그런데 특례 규정에는 “주로 하나의 사업장에 노무를 상시 제공한다”는 내용의 ‘전속성 요건’을 충족해야 산재보험이 적용되도록 명시하고 있어, 플랫폼 노동 등 최근 변화하는 고용형태를 가지는 사람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하고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기존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제도 전반을 개편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

주요 개정사항을 보면, 우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재정의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던 전속성 요건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최근 그 수가 증가한 배달기사와 같이 플랫폼을 통해 복수의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산재보험을 통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예컨대, 배달기사의 경우 종전에는 "한 업체에서 받은 월 소득이 115만 원 이상 또는 그 업체에서 일한 시간이 월 93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전속성이 인정되어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었는데, 전속성 요건을 폐지한 개정 법률 하에서는 이러한 월 소득·근로시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그동안 존재했던 산재보험 사각지대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현행법의 보호대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개정 법률 시행(2023. 7. 1.) 전이라도 전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보조사업장에서 입은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해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가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다른 중요한 개정사항 중 하나는 플랫폼 노동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부과 체계의 도입이다. 2021년 플랫폼 종사자가 전체 취업자의 8.5%(약 220만 명)를 차지하는 등 플랫폼을 통한 노무 제공이 활성화됐고, 향후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등으로 인해 플랫폼 노동의 규모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를 산업재해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개정법률은 노무를 중개·알선하는 플랫폼에게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를 원천공제해 납부하도록 하고, 산재보험 운영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보관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등 플랫폼 노동 현황에 맞는 산재보험 적용·부과 체계를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가 '실제 보수'에 근거해 산정될 수 있도록 보험행정 체계를 정비했다. 종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와 달리 노무제공의 대가로 받는 금액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으므로, 임시방편으로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종별 보수'에 근거해 산재보험료와 보험급여를 산정했다. 개정 법률은 현행 제도의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도 실제 보수에 근거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 향후 전망과 남겨진 과제

현재 약 79만 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법률 개정으로 약 63만 명이 추가로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 산재보험을 통한 보호 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노무제공자 직종을 어느 범위까지 확대할 것인지 여부, 개정 법률에서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에 관한 논쟁 등 논의가 필요한 과제들이 남아 있다. 산재보험제도가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러한 과제들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 수렴,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의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가상자산 시장의 투자자 보호방안,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 발급 개선 등 주제로 토론회 열려

##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투자자 보호방안’ 세미나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적절한 규율 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렸다.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은 7월 4일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투자자 보호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한목소리로 정부에 보완책을 주문했다.

박성원 법무법인 강앤파트너스 변호사는 제2의 ‘테라·루나 사태’를 막기 위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연관 법률을 개정하고 업계에 대한 일반 규제를 담은 ‘가상자산 업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화인 금융감독원 블록체인 자문위원은 가상자산의 중심은 기술이라고 언급하며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기반을 중심으로 기술 평가를 제대로 하는 정책적인 접근과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민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사무관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와 제도 마련이 필요하단 것에는 이견이 없으나,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는 향후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 더 자세히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어느 정도 민간의 서포트를 받아서 향후 법제화에 녹아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관이 협의해서 자연스럽게 법제화가 되도록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 발급 개선방안 토론회

이상민·최혜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월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 발급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재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은 장애인 당사자의 쉬운 승하차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보행장애가 있는 장애인, 그 가족이 보유한 자동차, 장애인복지시설·단체 등이 보유한 자동차에만 발급된다. 장애인 당사자 소유의 차량이 아닐 경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다.

반면, 해외에서는 이미 자동차 소유와 관계없이 장애인이 운전하거나 이동 보조가 필요할 경우 주차표지를 발급하고 있다. 보행자 거리나 주차금지구역에도 예외적으로 제한된 시간 내에 주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주차표지 발급 대상을 사람 중심으로 개선하는 것을 포함해 제도개선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자로 나선 김종배 연세대 작업치료학과 교수와 이용석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정책위원이 주차표지 발급 제도 관련 국내외 현황을 발표했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이문희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 이찬우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정책위원장, 이혜경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 정책개발팀장, 박종균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과장의 지정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법정주차대수 확대, 주차증 발급 등의 시스템 준비, 불법주차 관리 엄중한 단속, 강력한 공권력 개입, 장애인식개선교육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관련 내용 포함 등을 제시했다.

이후 박은철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장을 좌장으로 하여, 유소영 대한의사협회 정보통신이사, 김치원 카카오벤처스 상무, 김민기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 등 각계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눴다.

## '디지털헬스케어로의 전환, 그 임상적 근거와 경제적 가치' 정책토론회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은 7월 5일 '디지털헬스케어로의 전환, 그 임상적 근거와 경제적 가치'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의 발전을 위한 임상·경제적 근거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의학계, 산업계 전문가들은 현행 제도가 우리나라 디지털헬스케어 현장 적용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진료 현장에서 디지털헬스케어를 접목한 의료를 시행했을 때, 환자 편익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의료 수가 등 혜택을 누구에게, 어떻게,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 고찰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디지털헬스케어의 사회경제적 의미와 가치'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면서 디지털헬스케어가 좀처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재용 연세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디지털헬스케어의 환자 중심성과 임상적 근거'를 주제로 '환자 중심성' 지표 등의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 '코로나19를 통해 본 노인의료' 심포지엄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월 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코로나19를 통해 본 노인의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코로나19를 통해 드러난 노인의료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정책적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대한노인병학회, 대한노인의학세부전문의 추진관리위원회를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대한요양병원협회, 대한노인병학회와 보건복지부가 토론에 참여했다.

심포지엄에서는 건강한 고령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코로나19로 드러난 노인의료의 취약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기석 한림대 호흡기내과 교수, 손기영 울산대 가정의학과 교수, 윤종률 대한노인병학회 회장이 발제를 맡았다. 발제에서는 70세 이상의 지역사회 노인 411명의 미충족

의료 수요에 대한 심층 설문조사 결과가 함께 발표됐다.

이어 왕순주 대한응급학회 교수, 이중엽 대한예방의학회 교수,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고형우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과장이 토론에 나서 해외 사례를 통한 우리의 노인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시사점과 정책적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 반영구화장법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

홍석준 의원(국민의힘)은 7월 11일 '반영구화장법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반영구화장 합법화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전문가들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약 1조 3천억 원 규모의 반영구화장 시장이 형성되어 있을 만큼 이미 보편화돼 있고 해외 관광객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산업으로 성장할 경쟁력을 갖췄지만 비의료인에 의한 반영구화장은 의료법 27조 1항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불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일향 반영구화장합법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박승현 더윌 변호사, 이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정책연구팀장이 주제발표를 했으며, 반영구화장 합법화 비상대책위원들을 비롯한 관련 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종합토론에서는 "반영구화장이 합법화된다면 안전을 위한 사항은 필수로 지켜야 한다", "위생교육은 필수 사항으로 의료인에게 전문적인 교육을 받는다면 감염 위험성 등에 대한 예방이 가능하다"는 등 합법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 소아 희귀질환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7월 13일 '소아 희귀질환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소아 희귀질환 의료진, 신경섬유종증 및 유전성혈관부종 등 희귀·난치성질환 환아 보호자, 보건복지부·심사평가원·질병관리청 정부 관계자 등이 발제와 토론에 참여해 의견을 전했다.

토론회는 은백린 고려대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소아 희귀질환의 진단 및 국내 치료 환경', '국내 희귀질환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등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이범희 아산병원 의학유전학센터 소아내분비대사과 교수는 해외 치료 현황에 대해 발표했으며, 이형기 서울대병원 임상약리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희귀의약품 보장성과 관련한 다양한 제도가 있지만 현실 적용 기준이 달라 환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어렵다며 현실적인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토론에 참여한 민수진 유전성혈관부종 환우회 회장은 본인과 자녀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희귀질환 환자들이 경험하는 진단 자체의 어려움과 예방 옵션이 있음에도 사

용하지 못하고 있는 치료 환경을 설명했다.

오창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과장은 "소아희귀질환의 경우 평가 부분에서 예외를 두는 등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 학생성장통합지원을 위한 교육복지 공개토론회

조해진 의원(국민의힘)은 7월 13일 '학생성장통합지원을 위한 교육복지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개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학생 성장 중심의 교육복지 발전 방안'을 주제로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이 소외되거나 뒤처지지 않도록 학생들의 삶과 교육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장은 '교육복지 정책의 발전 방향'에 대한 기조강연에서 교육복지 정책의 사회적 배경과 각 정부별 교육복지 정책을 살펴보고, 해외 사례를 통해 교육복지 정책의 향후 방향을 제안했다.

신희경 청소년의 숲 이사장은 '지역에서 본 불리한 여건에 있는 청소년의 삶과 발달'에 대한 발표를 통해 이 시대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겪는 어려움과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성장하는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이돈집 삼정중 진로상담부장은 한 중학교의 사례 소개를 통해 학생이 중심인 통합지원을 위한 학교 내 협력적 지원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박경옥 대구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노성덕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본부장, 박경현 샘교육복지연구소 소장, 장덕호 상명대 교수, 이필우 경남교육청 사무관,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학생 성장 중심의 교육복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 포스트 코로나시대, 금연지원사업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신현영 의원은 7월 19일 '포스트 코로나시대, 금연지원사업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코로나19로 정체된 국가 금연지원사업의 현황과 함께 변화하고 있는 흡연 행태를 고려한 금연지원 서비스 방안을 모색해 발전 방향 등 현안에 대해 국회와 각 분야 전문가들이 의견을 교류하고, 실제 정책적 지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열리게 됐다. 토론회에서는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 센터장이 '코로나19 상황 속 국가 금연지원사업 현황 및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했고, 이어 동센터의 김진영 선임연구위원이 '흡연행태 변화를 고려한 금연지원서비스 개선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주제 발표 이후 토론에서는 백유진 대한금연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학계 전문가와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토론을 진행했다. 이철민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이훈재 인하대 의과대 교수, 조신행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과장 등 금연상담 및 치료 전문가와 정부, 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러시아 의회의 동향

지난 2월 24일 시작된 우크라이나 사태가 벌써 5개월을 넘어서고 있다. 러시아 국민들은 물론 전 세계 대부분이 러시아가 압도적으로 상황을 조기에 종료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우크라이나 국민의 끈질긴 저항과 러시아 군의 무기력으로 상황은 장기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미 국내외 언론을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의 상세한 내용은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있겠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를 전후한 러시아 국내, 특히 의회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듯하다.

우크라이나 사태 직전 '돈바스 지역 공화국의 독립지지 결의안'을 시작으로 '해외 파병권한의 대통령 위임', '서방제재에 대한 입법 지원' 등 러시아 의회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바람잡이와 방패막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오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 의회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고, 현재 어떠한 일들이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유승우**
국회 러시아 주재관

##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

2021년 10월 러시아는 군사훈련을 이유로 우크라이나 인근 국경에 10만명이 넘는 대규모 병력을 집결시키기 시작하고,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등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긴장이 높아진다.

올해 초 볼로딘 하원의장, 마트비엔코 상원의장 등 러 의회 지도자들은 '우크라이나의 민족주의화에 대한 우려', '나토의 우크라이나 점령설', '돈바스 지역 러시아계 주민의 보호 필요성' 등의 메시지를 내보내기 시작했고, 1월 15일 러시아 최대 야당인 공산당은 '돈바스 지역 공화국의 독립 지지 촉

구 결의안'을 제출하는 등 러 의회는 양국 긴장관계 고조에 적극 동참하기 시작한다.

2월 15일 러 하원은 처리 가능성이 낮았던[1] 공산당이 제출한 '돈바스 지역 공화국의 독립 지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해 채택했고, 그로부터 일주일 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긴급 소집된 국가안보회의를 이례적으로[2] 전국에 중계방송하면서 돈바스 지역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분석과 러 개입의 불가피성이 결정되는 과정을 국민들에게 보여준다. 그리고 그날 저녁 대국민 연설을 통해 "돈바스 지역 두 공화국의 독립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발표하고, 1시간 뒤 두 공화국의 독립을 인정하는 문서에 서명한 데 이어 곧바로 두 공화국 수장과 '양국 간 상호 지원 협정'을 체결한다.

의회로 넘어온 '두 공화국과의 상호 지원 협정'은 다음 날 의회에서 승인되고, 여기에 더해 상원은 그들의 권한인 '해외파병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하는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언제라도 대통령이 결심만 하면 합법적으로 러시아군을 해외 군사작전에 동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 그리고 이틀 뒤 새벽 러시아군의 전격적인 무력도발이 시작된다.

##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예상치 못한 러시아군의 무력침공에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미국과 EU 등 서방 국가들은 다양한 경제제재로 러시아를 압박한다. 국제금융시장 접근을 제한하고, 각종 소비재 및 핵심 원자재의 수출입을 금지해 버린다. 러 정부와 특정 개인의 해외자산을 모두 동결해 버리고, 유럽 각국은 러시아 항공기의 영공통과를 금지한다. 러시아에 진출했던 외국계 회사들은 사업을 철수하거나 잠정 중단한다.

이러한 서방의 제재는 이안류처럼 부지불식간에 러시아 사회를 순식간에 삼켜버린다. 전 세계 모든 명품 매장들이 즐비하던 모스크바 대형 고급 백화점들은 외관의 화려한 조명만 남았고, 한두 시간이면 갈 수 있는 인접 국가를 8시간 이상 돌아가야 한다. 변기 뚜껑, 샤워기 부속, 자동차 전조등 같은 사소한 생활용품마저 시장에서 사라지고, 해상을 통해 운송되던 화물들은 몇 달째 바다에 떠있어야 하며, ABS, 에어컨, 에어백, 자동 창문 같은 최소한의 안전 및 편의사양도 없는 자동차가 21세기 신차로 출시된다. 러시아는 불과 4개월 사이에 1980년대 소비에트 공화국 시절로 타임 슬립 해버린다.

서방의 제재에 맞서 러시아 정부는 가장 먼저 외화 통제를 시행함으로써 루블화를 안정시키며,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병행수입을 허용해 수입품 부족현상을 완화시키는 등 국내 시장안정을 위한 대책을 시행하는 한편, 유럽으로의 에너지 공급을 축소하고, 제재에 동참한 국가들을 비우호국가로 지정해 역 제재를 가하는 등 서방을 상대로 대응에 나서기 시작한다.

러시아 의회 역시 입법을 통한 적극 대응에 나선다.

1) 동 결의안 제출 당시 크렘린이나 집권여당인 통합러시아당은 별도의 논평을 거부하며 처리 의지를 보이지 않았음.

2) 그동안 국가안보회의 관련 내용은 그 결과만을 보도하는 방식이었으나 이번 회의는 회의 내용 전체를 편집하여 중계 방송함.(CNN 등 외신이 동 중계방송을 생중계라고 오보할 정도로 생중계 형식으로 편집해 방송)

우크라이나 사태 초반에는 유언비어 유포나 정부의 행위에 반대하는 여론형성을 통제하고, 각종 연금 및 수당 인상, 세금 유예 및 축소 등으로 민심의 동요를 방지하는 등 국내 여론을 안정시키고 일반 서민을 달래기 위한 입법에 총력을 다한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 추세로 굳어지는 시점에는 참전 군인에 대한 지원 강화, 전시 사망 및 부상자와 그 가족들의 지원 확대, 징병 대상 확대, 전시물자 동원 체제 구축 등 전시 상황 유지를 위한 입법활동에 주력한다. 최근에는 돈바스 지역 두 공화국 의회와 교류를 통해 해당 공화국의 법률체계 구축 및 러시아 입법체계와의 통일을 위한 공동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후 복구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하는 등 합병의 밑그림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

## 향후 러 의회의 활동 방향

얼마 전 푸틴 대통령은 의회 및 정당대표들과의 대화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아직 시작도 안했다"고 언급했다. 엄포 또는 허세라는 평가도 있으나 사태의 조기 종료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러시아 의회에서는 '외국기업의 강제 국유화', '징집 대상 확대', '전범 및 전쟁포로 처리 방안' 등의 현안이 분야별로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고, 아직은 제기되지 않은 상태지만 제일 중요한 이슈인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의 러시아 편입'을 승인하는 문제도 해당 지역의 주민투표를 거쳐 의회로 넘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수의 러시아 의원들은 휴가를 겸한 휴회 기간임에도 경쟁적으로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을 방문해 지원 및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러 하원은 임시 특별회의를 소집해 부총리 임명 등 일부 현안을 처리하고, 계속해서 임시 특별회의의 수시 소집을 통해 다양한 현안 처리와 전후 복구를 위한 입법활동에 치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크라이나 사태 전후 러시아 의회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국내 여론을 안정시키고, 서방 제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했으며, 전쟁지속능력을 확대하는 등 국가적 위기상황을 맞아 정부와 혼연일체가 되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입법지원 등을 신속하게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5개 교섭단체 중 어느 곳에서도, 620명의 의원 중 단 한 명도 정부의 결정에 공식적인 이견을 제시한 사람이 없으며, 사태의 조기 종결을 주장한 이도, 러시아 군의 불법행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이도 없었다.[3)]

견제 기능을 상실한 러시아 의회의 이러한 태도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길어지게 된 또 다른 원인이자 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면서, 아직은 공식적으로 표면화되지 않고 있는 사안이지만, 우크라이나 동부지역과 러시아와의 합병과정에 러시아 의회는 어떤 역할을 부여받을지 앞으로 주목해보고자 한다.

3) 우크라이나 사태 초기(2월 말) 공산당 소속 일부의원(2명)이 무력침공을 비판한 내용을 개인 SNS 등을 통해 게재한 사례가 있으나, 그 이후 이러한 활동은 지속되지 못했고, 상·하원 의원 누구도 공식석상이나 언론 인터뷰, SNS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정부행위에 반대 의견을 개진한 사례를 찾을 수 없음.

# NEWS

## 국회사무처 법제실, ‘제헌 74주년 기념 학술대회’ 개최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7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공법학회와 공동으로 ‘제헌 74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현대사회의 변화와 갈등에 대한 헌법적 대응’이라는 주제로 권력분립원리의 현대적 의미를 재해석하고,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의 역할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학술대회 축사를 통해 “지역, 이념, 계층, 세대, 성별 등 우리 사회의 갈등이 갈수록 복잡다단해지고 불평등과 양극화도 한층 심각해지고 있으며, 진영 대결, 팬덤 정치, 극단적 대결주의가 초래하는 부작용도 심대하다”면서 “승자독식 패자전몰의 정치제도에서 비롯된 폐해는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패권적 정치문화를 바꾸고 권력을 분산해 협력의 정치를 이뤄낼 헌정 제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헌법은 국가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최고의 가치체계로서,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고 미래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대화와 타협이 꽃피는 국회, 삼권분립의 원칙에 충실한 국회, 헌법기관의 역할을 다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오늘 학술대회에서 지혜를 모아 구체적인 해법을 많이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제1주제인 ‘권력분립원리의 현대적 상황과 헌법적 대응’에 대해 권건보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제와 전상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완중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상열 국회 법제실 정치행정법제심의관의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제2주제인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제와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세주 가톨릭대 법학과 교수, 임재금 국회 법제실 경제산업법제심의관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 국회의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생 국회 실무수습’, ‘지방의회 초선의원 연수’ 실시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은 7월 4일부터 7월 15일까지 2주간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 대상 국회 실무수습을 온·오프라인으로 실시했다. 국회 업무 실습을 통해 우수 법조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이번 과정에는 전국 24개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생 96명이 참여했다.

특히, 이번 과정은 ‘입법과정론’, ‘예산·결산 및 기금심사’ 등의 이론과목과 더불어 ‘법제실무수습’, ‘법률안 검토보고서 작성’ 등 분임별 실습과목을 함께 구성해 이론과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법조인 출신인 국회의원 및 국회직원과의 대화를 통해 입법 및 예·결산 과정 등의 생생한 경험담을 직접 들어

# NEWS

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 향후 진로 선택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연수생 대표로 선출된 김법성(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은 "국회의 다양한 실무를 경험하고 국회의 역할과 정치의 중요성에 대하여 배울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으며, 특히 분임원 간 협업을 통해 다양한 사례를 실습한 분임활동 시간이 인상적이었다"라고 연수소감을 밝혔다.

'법학전문대학원생 국회 실무수습'은 2010년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와 국회사무처간 MOU를 체결해 과정을 개설한 이후 현재까지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법학전문대학원생 총 762명이 수료했다.

한편 의정연수원은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의회 초선의원 155명을 대상으로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지방의회 초선의원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과정은 지방의회 최다선 의원출신의 특강을 시작으로 회의운영론, 조례안 입안 및 심사, 조례안 사례연구, 예산안 및 결산심사, 예산안·결산 사례연구, 지방재정, 의정활동 전략과 기법, 행정사무감사 등 실제 의정활동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과목으로 편성했고, 의정활동 전반에 관해 기본과정과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최고의 강사진을 초빙함으로써 초선의원들이 이론과 실무를 동시에 익힐 수 있도록 했다.

향후 지방의회 의원연수과정은 8월 22일~26일, 10월 24일~28일에 2회 더 실시될 예정이고, 지방의회 의원들의 연수 편의와 해당 권역 소재 지방의회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지방의회 의원연수'가 추가 실시될 예정이다.

국회의정연수원은 1995년부터 '지방의회 전문연수과정'을 운영해 28년간 지방의회 의원 9천216명과 지방의회 직원 1만4천186명 등 총 2만3천402명의 수료자를 배출한 국내 최고의 의회 전문 연수기관이다. 특히. 이번 연수과정은 접수 시작 4분 만에 모집인원을 돌파했을 정도로 참여 열기가 뜨거웠다.

## 국회 인사 - 차관급

**박장호** 입법차장

· 서울 잠실고, 한양대 행정학 학사, 서울대 행정학 석사, 미국 루이스앤클락로스쿨 법학박사, 미국 변호사(뉴욕주)

· 입법고시 13회, 법사위·과기정위·국토위·산업위 입법조사관, 회계과장, 운영지원과장, 뉴욕 입법관, 예결특위 입법심의관, 국회예산정책처 기획관리관, 국제국장, 산자위·법사위 전문위원, 법사위 수석전문위원

**홍형선** 사무차장

· 수원 수성고, 충북대 농업경제학 학사, 미국 콜로라도주립대 행정학 석사, 연세대 행정학 박사

· 입법고시 13회, 농해수위·정무위 입법조사관, 입법정보화담당관, 행안위 입법조사관, 기획담당관실 기획담당, 대변인실 공보담당관, 예결특위 총괄팀장(부이사관),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 조세분석심의관, 복지위 전문위원, 기획조정실장, 복지위 수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

### 박태형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전주 한일고, 서울대 경영학과 학사, 미국 하버드대 행정학 석사
· 입법고시 14회, 운영위·정무위 입법조사관, 의사국 의안과장, 의사과장, 운영위 입법심의관, 기재위 전문위원, 의사국장, 농해수위 수석전문위원

### 정성희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강릉여고, 고려대 행정학 학사, 서강대 경제대학원 석사,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법학 박사, 미국 변호사
· 입법고시 13회, 행안위 입법조사관, 인사과장, IPU 파견,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장, 행안위 전문위원, 행안위·국방위 수석전문위원

### 고상근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인천 강화고, 연세대 행정학 학사, 서강대 경제학 석사, 성균관대 정책학 박사 수료
· 입법고시 12회, 법사위·정무위·건교위 입법조사관, 행정법무담당관, 의정종합지원센터장, 경제법제심의관, 국토위 전문위원, 농해수위 전문위원. 법제실장, 환노위 수석전문위원

### 김일권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서울 중동고, 서울대 영어영문학과, 미국 TUFTS대 국제관계 석사
· 입법고시 제12회, 외통위·교육위·농해수위 입법조사관, 국제국장, 예결특위 전문위원, 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 특별위 수석전문위원, 행안위 수석전문위원

### 채수근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충남 신평고, 서울대 국민윤리학 학사, 미국 아이오와대 교육행정 석사, 서울시립대 행정학 박사 수료
· 입법고시 13회, 교육위·농해수위 입법조사관, 운영지원과장, 교문위 입법심의관, 미방위 전문위원, 감사관, 교육위 전문위원, 국회의정연수원장, 산자중기위 수석전문위원

### 김건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안양고,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서울대 행정학 석사, 영국 맨체스터대 정책학 박사
· 입법고시 13회, 의사국 의안담당, 기재위 입법조사관, 예결위 총괄팀장, 조사처 정치의회팀장, 예정처 기획협력담당관, 경제법제심의관, 교문위·과방위·농해수위 전문위원

# NEWS

**조기열**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서울 동북고, 중앙대 행정학 학사, UNIVERSITY OF KANSAS 도시계획 석사(MUP)
- 입법고시 12회, 건설위·재경위·건교위·법사위·국회운영위 입법조사관, 기획1담당, 의안과장, 러시아 입법관, 국회의정연수원장, 국토위·교육위 전문위원,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 과방위 수석전문위원

**김병주** 국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조선대 부속고, 성균관대 영어영문학 학사, 영국 사우스햄튼대 정치학 석사, 성균관대 행정학 박사 수료
- 의사과 의사1담당, 정무위·국회운영위 입법조사관, 의정종합지원센터장, 정보위 입법심의관, 관리국장, 농해수위 전문위원, 정보위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서울 보성고, 고려대 정치외교학 학사, 인디애나 주립대 법학 석사,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 박사
- 입법고시 13회, 국회사무처 법규담당, 인사담당, 관리과장, 국토위 조사관, 예결특위 심의관, 외통위·국토위 전문위원, 국회의정연수원장, 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

**정연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진주 동명고, 한국외국어대 영어학 학사, 고려대 법학 박사 수료
- 입법고시 13회, 국토해양위·기재위 입법조사관, 법제실 경제법제심의관, 보건복지위·법사위 전문위원, 헌법개정특별위·사법개혁특별위 전문위원, 정보위·기재위 수석전문위원

**권영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강릉고, 경희대 무역학 학사, 경희대 행정학 석사
- 입법고시 14회, 의사국 의안·의사담당·의사과장, 농해수위·운영위 입법조사관, 운영위 행정실장·입법심의관, 기재위 전문위원, 의사국장, 국회운영위 수석전문위원

**이상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대전고, 고려대 행정학과,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행정학 석사, 경남대 대학원 정치외교학 박사 수료
- 입법고시 12회, 법사위·산자위 입법조사관, 국회예산정책처 사회사업평가팀장, 예결특위 심의관, 주오스트리아대사관 공사, 보건복지위·정무위 전문위원, 법제실장, 문화체육관광위 수석전문위원

**진선희**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수원 영복여고, 이화여대 법학 학사, 미국 캘리포니아대 데이비스(UC DAVIS) 법학 석사
- 입법고시 14회, 법제실 법제관, 법사위·교육위·외통위 입법조사관, 관리국 관리과장, 법제실 경제법제심의관, 법제실 행정법제심의관, 주오스트리아 대사관 공사, 법사위 전문위원, 특별위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정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서울 서라벌고, 성균관대 경제학 학사, 미국 워싱턴주립대(WSU) 정책학 석사
- 입법고시 15회, 국제국 미주과장, 국회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장, 국제국 심의관, 국방위 전문위원,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경제산업조사실장, 의정연수원 교수, 외통위 전문위원

**오창석**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광주 제일고, 한국외대 서반아어과 학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미 조지아대 행정대학원 석사
- 입법고시 14회, 재경위·예결위·산업위·정무위 입법조사관, 기재위 행정실장, 국제국 의전과장·심의관, 미방위 입법심의관, 정무위·예결위 전문위원, 법제실장

**지동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부산 브니엘고, 서울대 경제학 학사, 서울대 행정학 석사, 텍사스 A&M 대학교 경제학 석사
- 입법고시 14회, 재경위 입법조사관, 예결특위 입법조사관(총괄팀장), 기획예산담당관, 예결특위 입법심의관,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국장, 산자위 전문위원, 외통위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영신고, 고려대 행정학 학사,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행정학 석사
- 입법고시 13회, 공보관실 홍보담당관, 국회예산정책처 경제예산분석팀장, 기재위 입법조사관, 미국(워싱턴) 주재관, 행안위·복지위·기재위 전문위원,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

**김수옥**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군산 영광여고,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학사, KDI 국제대학원 석사
- 문광위 입법조사관, 국회예산정책처 사회사업평가팀장, 법제실 행정법제과장, 여가위 심의관, 국회의정연수원장

# NEWS

## 국회도서관, 한국법제연구원 공동국제세미나 개최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7월 14일 한국법제연구원과 '사법절차에서 외국인의 인권보호와 통번역'을 주제로 공동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김기현 의원을 비롯한 국회 내외빈이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가 증가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유학생, 난민신청자 등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2년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00여 만 명으로, 총인구의 5%에 달한다.

이번 공동국제세미나는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민자 등이 사법절차에서 잘못된 통번역으로 인권침해와 법적인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격려사에서 "외국인도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인 '인권' 문제에서 소외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계층의 어려움을 찾아내고, 이를 제도적 관점에서 직시하며,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일에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미나는 1세션과 2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제1세션에서는 '주요국의 인권보호와 사법통역'을 주제로 우리나라와 미국, 뉴질랜드, 스웨덴의 사법통역 관련 연구자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제2세션에서는 '우리나라 사법통역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초청해 사법통역의 이슈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사법통역 분야에서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의 인권보호 방안을 고찰해 보고, 현장 실무전문가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 통번역과 관련된 우리나라 사법절차를 한 번 더 검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국회예산정책처, 한국경제학회와 업무협약 체결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임익상)는 7월 4일 국회 의정관에서 한국경제학회(회장 이종화)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회예산정책처와 한국경제학회의 업무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재정·경제 분야 연구에 이바지하고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공동 연구와 정보 교류, 공동세미나 등 학술행사 개최, 전문가의 상호 활용 및 추천 등 다방면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이종화 한국경제학회장, 김덕파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홍기석 이화여대 경

제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NARS INFO' 제25호 발행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7월 12일 'NARS INFO' 제25호 '초고령사회 대비 고독사(孤獨死) 대응 현황과 과제'를 발행했다.

이번 'NARS INFO' 제25호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중으로 첫 고독사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이를 반영해 마련될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은 고독사 예방을 위해 취약한 1인 가구에 대한 다양한 맞춤형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고독사와 무연고사(無緣故死)에 대한 통합적인 개념 정의를 마련하는 입법적 고민에 대해 다뤘다.

고독사의 정의, 1인 가구 현황과 추계, 연령별 1인 가구 수, 생애주기별 고독사 위험 요인, 고독사와 무연고사 개념의 혼용과 과제, 17개 시·도별 고독사 사망자 현황 등으로 사회적인 고립 사례들을 발굴해 외로운 죽음을 예방하는 것에 집중하고, 무연고사와 고독사 간의 통합적인 개념정의를 마련하는 입법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 국회미래연구원, '한반도 중장기 미래전략 : 연합적 거버넌스의 탐색' 개최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국회

의원연구단체(국회국민통합포럼 및 국회한반도평화포럼)와 공동으로 '한반도 중장기 미래전략: 연합적 거버넌스의 탐색'을 주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7월 7일과 8일 이틀간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 원장, 김범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부원장이 개회사를 했으며, 정운천 국회 국민통합포럼 대표의원, 김한정 국회 한반도평화포럼 대표의원이 축사를 했다.

학술회의 1일 차 발제는 김범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부원장의 사회 하에 '한반도 연합적 연합적 거버넌스의 탐색: 이론과 회고, 쟁점'을 주제로 진행됐고, 2일차에는 박현석 국회미래연구원 거버넌스그룹장의 사회하에 '유럽연합 연합적 거버넌스의 탐색: 이론과 쟁점'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번 학술회의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반도의 공존, 통합의 가능한 미래, 다양한 한반도 사회구성원의 선호를 반영하는 미래로서 한반도 연합적 거버넌스의 비전과 전략을 다뤘다.

특히 기후위기, 보건의료 팬데믹, 블록체인과 같은 공동의 미래 이슈로부터 언어, 사회통합에서 안보, 경협에 이르는 전통적 협력/갈등의 영역을 포괄함으로써 다면적이고 다중심적인 연합적 거버넌스의 미래전략을 제시했으며, 연합적 거버넌스의 탐색과 관련해 유럽연합의 경험을 주요 정책 영역별로 고찰함으로써 국제 비교적 시각을 제공했다.

# 극지의 연구, 전문 인력 양성을 체계적으로 지원

‘극지활동 진흥법’[시행 2021.10.14]

남극 및 북극 등 극지(極地)는 전 지구적 기상이변,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으로, 온난화로 인한 극지 빙권의 감소는 극지의 경제적 이용·개발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극지 연구와 보존,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수요를 높이고 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남·북극 과학연구, 인력 양성 등 극지활동을 활발히 추진했지만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극지와 관련된 국내법은 2004년 9월 제정한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 유일했다. 이 법은 국제조약인 남극조약(남극지역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국제 조약)에 따라 동식물 보호, 환경평가 등 남극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적용 범위가 ‘남극’과 ‘과학연구’로 제한돼 있었다. 남·북극을 포괄해 과학연구, 경제활동 등 다양한 극지 활동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극지활동 진흥법’이 2021년 3월 24일 본회의에서 의결, 같은 해 10월 14일 시행됐다. ‘극지활동 진흥법’의 제정 의미와 내용, 성과 등을 알아봤다.

### 제1차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 올 12월 발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정엽 입법조사관은 ‘극지활동 진흥법’의 제안 이유에 대해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극지의 지속가능성 문제가 대두되고, 거대한 과학연구의 장이자 미래 자원의 보고로서 기회의 공간인 극지의 활용가능성을 고려하여, 극지활동을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국제사회에서 인류 공통의 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극지활동 진흥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해양수산부는 5년마다 극지 활동 기본 방향, 연구 목표, 재원 확보 등의 내용을 담은 ‘극지활동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 국가는 극지와 관련된 연구 개발을 활성화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 극지는 초저온 등 극한 환경으로 인해

과학기지, 쇄빙선과 같은 특수한 연구시설 없이는 연구를 수행하기 힘들기 때문에, 정부에서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대학·연구기관·기업에서 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해빙 등으로 북극에서의 경제 활동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가 북극항로 등 경제 활동을 진흥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했다.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개발과 서민정 극지정책팀장은 ‘극지활동 진흥법’ 시행 성과에 대해 “법 시행 이후 이 법에 따른 법정계획인 제1차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이 수립 중에 있고 올해 12월 발표될 예정이다. 이 계획에는 극지활동의 기본방향, 추진체계와 전략, 기반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 극지 분야의 연구 활동, 환경보호, 전문인력양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며 “법률 제11조(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라 극지연구 기반인 차세대 쇄빙연구선의 설계가 올해 시작돼 2027년 본격 운항이 가능해져 기존 쇄빙선 ‘아라온’호와 함께 더욱 활발한 연구 활동이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 덴마크와 극지 과학기술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덴마크 고등교육과학부와 ‘극지 과학기술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해각서는 △남·북극 과학기지, 쇄빙연구선, 드론 등 극지 연구 기반과 연구개발 정보 교환 △극지 전문가 상호 교류 및 교육·훈련 기회 부여 △극지 조사·탐사 공동 참여 △심포지엄, 워크숍 등 학술행사 공동 개최 등 극지와 관련한 다양한 영역에서 연구 및 기술 활동 수행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덴마크는 주요 북극 연안국 중 하나이자 우리나라의 주요 북극 파트너로서 기후변화 대응과 북극거버넌스 관련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있

쇄빙선 ‘아라온’호

고, 국책연구기관 등을 통해 북극과학협력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극지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우리 연구기관들은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 오후스 대학, 덴마크 공과대학 등 덴마크 연구기관과 함께 그린란드 일대의 현장조사와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6월 말부터 7월 말까지 우리나라 국적의 대학원생, 학부 졸업 예정자 및 졸업자를 대상으로 ‘제7회 극지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했다. 해양수산부는 우수한 인재들에게 극지 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함께 2016년부터 ‘극지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그간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총 35명의 학생들이 남·북극권 대학에서 단기 해외연수에 참여했고, 2020년과 2021년에는 국내 교육으로 총 46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수료생 중 일부 학생은 그린피스, 극지연구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립수산과학원,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 등 국내외 극지 관련 기관에 취업했고 국내 등재학술지에 극지 관련 논문을 게재하기도 했다.

해양수산부 측은 “이번 ‘극지활동 진흥법’과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추진 등으로 국내 극지정책 여건에 대한 기반이 마련됐다. 다양한 채널의 국제협력을 바탕으로 국가 위상에 걸맞은 극지활동 선도국가로서 역할을 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글 고영선

#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환경을 확보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한 보호·관리를 강화합니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환경노동위원회 2022-05-16 의결
본회의 2022-05-29 의결

※ 법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회 홈페이지 www.assembly.go.kr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구성** 이진택

# 미래시장 선점 위한 AI 반도체 개발

**AI 반도체 개발업체 '딥엑스'**

이달에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추천한 AI(인공지능) 반도체 개발업체 '딥엑스'의 신기술을 소개합니다. 딥엑스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실시한 '2020년 차세대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설계) 13개 과제 공모'에 선발돼 총 5개년(2020~2024)의 연구개발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딥엑스를 찾아 AI 반도체 기술의 현황과 내용, 과제를 알아봤습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이 미래 반도체 산업의 중추로 떠오를 전망이다. 2025년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은 70조 원 가량으로 성장하고, 2030년에는 약 1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까지의 반도체가 정보(데이터)를 입력한 순서대로 처리했다면 AI 반도체는 대량의 데이터를 동시(병렬) 처리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래픽처리장치(GPU, Graphics Processing Unit)는 동시에 계산해야 하는 그래픽을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병렬처리 반도체로 계산이 가능한 여러 반도체를 장착해 대규모 연산 때는 중앙처리장치(CPU, Central Processing Unit)보다 성능이 우수하다. AI 반도체인 신경망처리장치(NPU, Neural Processing Unit)는 심층 신경망(Deep Neural Network)을 사용하는 복잡하고 무거운 딥러닝 연산을 CPU, GPU보다 저전력, 고효율로 처리할 수 있는, 인공지능 연산처리에 가장 최적화된 시스템 반도체라고 한다. AI 반도체 개발업체인 딥엑스는 2019년에 독자 NPU를 개발했다. 딥엑스의 김녹원 대표이사는 "배터리로 작동하는 전자기기에 CPU, GPU를 활용할 경우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고, AI 연산처리 성능이 떨어지며 배터리 수명이 짧아지고 과열될 수 있어 NPU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8년 설립된 딥엑스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스타트업 100,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4차 산업혁명 우수기업에 선정됐으며 '4차 산업혁명 스마트 AI 혁신상'을 수상했고 창업 이래 현재까지 AI 반도체 관련 100건 이상의 특허를 출원했다. 주요 제품인 '딥엑스 시리즈'는 딥엑스가 독자 개발한 NPU 기반 시스템온칩 형태의 제품으로, 낮은 전력 소모와 높은 AI 연산처

리 성능을 제공하는, 인공지능 연산처리에 최적화된 시스템 반도체다. 딥엑스 측은 딥러닝 기반의 객체 인식, 얼굴 인식, 음성 인식, 이미지 분류, 화질 개선 등의 최신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연산 처리를 지원하고, 데이터 처리량이 적은 초소형 센서부터 최고 성능의 AI 알고리즘 연산을 요구하는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서버까지 진화하는 AI 생태계에 맞춰 체급별 AI 연산 성능과 다양한 기능으로 조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제품군은 DX-L1, DX-L2, DX-M1, DX-H1으로 총 4가지 솔루션으로 구성되고, 올해 하반기부터 삼성 파운드리의 5나노, 14나노, 28나노 공정에서 제작돼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라고 한다.

## AI 반도체, 2030년 100조 원 시장 전망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현재 AI 반도체를 개발하는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50곳 이상이다. AI 반도체 시장은 미국 거대 정보기술(IT) 기업 주도하에 설계와 제조라는 기존 생태계에, AI 제품과 서비스를 연결하는 새로운 생태계로 시장이 열리고 있다. AI 반도체의 주요 사용처는 데이터센터와 엣지 디바이스(시스템 말단에 위치한 작은 기기)로 세분화하는 중이다. IoT로 연결된 집안 센서나 스피커, 들고 다니는 휴대전화가 모두 엣지 디바이스에 해당한다.

데이터센터용 AI 반도체는 CPU와 GPU를 기반으로 미국 업체 엔비디아와 인텔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아마존웹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IBM, 구글 등 글로벌 4대 클라우드 서비스에 사용되는 AI 가속기의 97%를 엔비디아가 점유하고 있다. 엣지 디바이스 AI 반도체는 스마트폰과 자율주행차를 주력 분야로 삼고 있으며 구글,

딥엑스의 김녹원 대표이사가 자사의 기술을 설명하고 있다.

퀄컴, 테슬라 등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국내 기업 역시 AI 반도체 시장에 관심을 두고 관련 기술력을 키우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퓨리오사AI, 사피온코리아, 딥엑스, 오픈엣지테크놀로지, 모빌리트, 리벨리온 등 반도체 스타트업이 AI 반도체 개발에 적극적이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미래 AI 반도체 시장은 향후 3년 이내 엣지 디바이스용 NPU가 73%를 점유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딥엑스의 김 대표이사는 "IT 강국인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CPU, GPU 분야에서 천문학적인 로열티를 지불해왔는데, 새롭게 펼쳐질 AI 반도체는 우리나라의 기술 독립과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다. 국내에서 점점 고조되는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열기를 기반으로 한국 첨단 기술 스타트업으로서 최첨단 시스템 반도체의 원천기술을 개발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AI 반도체에 힘을 실어주기로 하고, 6월 말 육성 정책을 발표했다. 관련 기술 연구개발(R&D) 지원을 위해 향후 5년간 1조200억 원을 투입하고 전문인력 7천 명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판교: 글 고영선

# “한의학으로 국회의 기(氣)를 끌어올리겠습니다”

**신미숙**
국회 본관 한의진료실 원장

**Q. 국회사무처 소속 1호 한의사 공무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언제부터 근무하셨는지, 국회에서 일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A. 2014년 1월에 입사했으니 햇수로 벌써 9년 차에 접어들었네요.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던 중 국회에서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아는 거의 모든 분들이 정년이 보장된 국립대 교수를 버리고 임기제 국회 공무원 자리에 지원한 이유를 많이들 궁금해하셨어요. 서른에 한의대 교수가 되어 10년을 달려왔는데 진료와 강의 준비, 수업과 외부 특강 등 여러 잡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느낌이 컸습니다. ‘이런 식으로 햇수만 늘린다고 더 좋은 선생이 될 수 있을까….’ 고민이 극한에 도달했고 제 개인적으로 그 어떤 변화라도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국회에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첫 번째 한의사라면 저 자리는 내가 제격 아닐까’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지원을 했는데 다행히 합격했습니다.

**Q. 하루 몇 명 정도의 환자가, 주로 어떤 질환으로 내원하나요. 또 국회 한의진료실만의 특별함이 있다면?**

A. 평균 50~70명 정도 진료를 봅니다. 국회에는 사무, 행정, 연구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각종 척추, 관절 통증 환자가 최다빈도를 차지합니다. 특히 속기사 분들은 어깨, 손목, 손가락 통증을 많이 호소하시고 직원 분들은 발목, 무릎 통증으로도 자주 오십니다. 그 이외에도 불면, 소화불량, 불안, 두통, 어지럼증 등 다양한 내과, 신경과 질환을 상담하기 위해 오시고 본인 체질상담과 가족 분들의 약 처방 때문에도 내원하십니다.

저희 진료실만의 특별함은 뭐가 있으려나요? 요즘 외부 병의원들의 인테리어를 접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최고

급 호텔에 버금가는 기자재로 환자들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국회 한의진료실은 사내 의무실 개념이라 어찌보면 소박한 사무실 공간에 치료실 전용 베드와 필수 의료기기만 갖추고 있어서 그 나머지는 저 혼자 다 채워야 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부터 미화 여사님들까지 그 어떤 분들이 오셔도 한의학적인 치료로 더 가벼운 마음과 몸으로 진료실을 나설 수 있도록 '유명하다는 외부 병의원 못지 않다는 소리를 들어보자!', '임상 한의학의 힘을 보여주자!'라는 파이팅 넘치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부정할 수 없는 특별함이 있다면 국회의원을 환자로 자주 접할 수 있다는 것이겠지요.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뉴스로 동정을 꿰뚫고 있던 의원님들이 환자로 방문하셔서 치료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의학에 대한 의원님들의 견해도 직접 들을 수 있어서 한의학을 매개로 대화가 풍성해질 때 국회에 근무하고 있으니 이런 특별한 경험도 가능한 것이라는 자부심이 느껴지곤 합니다.

### Q.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많을 것 같습니다. 보람된 일도 있을 것 같고요.

A. 한의대 교수로 근무하던 시절에도 제 연구테마 중 하나는 '척추수술실패증후군(FBSS: Failed Back Surgery Syndrome)'이었습니다. 무자비하게 권유되고 시행되는 많은 척추수술의 횟수도 문제지만, 수술 후 긴 시간 재활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통증과 불편함을 감내하면서 집도의를 상대로 한 의료소송을 진행하느라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많은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인지 경추디스크, 요추디스크로 수술을 권유받고 망설이는 많은 직원분을 수술 받지 않고 한의학적 치료로 호전시킬 수 있다고 설득을 했으며 많은 분들이 척추수술의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입원실이나 재활치료 시설이 전무한 저희 진료실에서 이런 상황을 다 해내기에는 무리가 많았지만 입원이나 추가로 운동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밖에서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하기도 했고요. 전국적인 명성을 가진 유명 대학병원의 교수님들은 수만 명, 수십만 명을 살려내셨겠지만 소박한 한의사인 저도 지난 9년간 많은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들었으니 저 스스로 국회에서의 시간은 충분히 의미 있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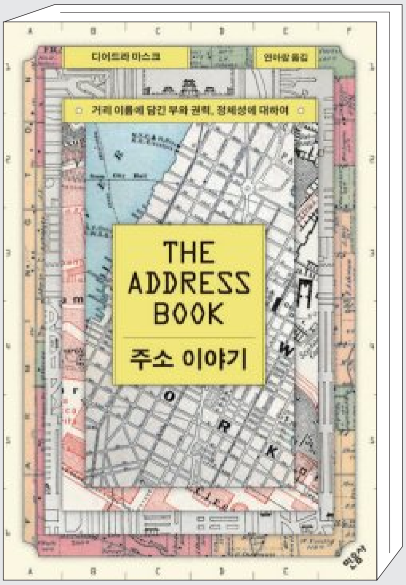
### Q. 앞으로의 포부와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A. 공무원 한의사로 근무를 하다 보니 보람도 있지만 동시에 부담도 자주 느낍니다. 금지된 활동도 있고 공간이 공간이니만큼 조심스러운 점도 많습니다. 국회사무처에 처음 임용된 공무원 한의사인 만큼 제가 기준이 될 수도 있고 많은 후배의 거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의사 선후배가 다양한 공간에서 공무원으로 정식 채용되어 합당한 처우를 받고 그 대우 이상으로 진료로 봉사할 수 있는 자리를 열어주기 위해서라도 현재 제가 서 있는 이곳에서 더 열심히 근무하려고 합니다.

제가 평소에 자주 읊조리는 주문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인연이고 모든 것이 운명이다", "지금까지도 좋았고 앞으로 더 좋을 것이다"입니다. 운명처럼 국회에서의 근무가 시작되었듯 운명이 이끄는 곳이라면 어디로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신 국회 근무를 명받은 마지막 날이 정해지면 그날, 마지막으로 방문하실 그 환자분의 진료를 마무리할 때까지도 성실함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글** 윤성혜

# 주소 이야기




**저 자** 디어드라 마스크
**역 자** 연아람
**출판사** 민음사
**출판일** 2021. 11.

한국의 체신 역사를 소재로 희곡(戱曲)을 쓴 적이 있다. 이를 위해 고종시대에 설립된 우정국으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120여 년 체신국의 역사와 집배원의 에피소드를 훑었다. 이런 까닭에 이 책은 필자에게 낯설지 않다.

구어의 시대에서 문어의 시대로 옮기면서 인간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그 무엇에도 이름을 붙여주었다. 이러한 상징은 신화를 만들고, 신화는 영웅을 만들고, 영웅이 전쟁을 만들고, 전쟁이 다시 역사를 만들고, 역사는 새로운 상징을 만들었다. 그렇게 인류사는 축적됐다. 영웅들의 이름을 딴 도시가 건설되고, 영웅을 기념하는 거리도 만들어졌다. 물론 마을의 전설과 풍습과 일상적 삶의 형태와 중요한 사건도 반영해 마을 이름이 만들어졌다.

"이 모든 것은 대개 권력에 관한 문제다. 이름을 짓고, 역사를 만들고, 누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 왜 중요한지를 결정하는 권력 말이다. 도로에 이름을 짓고 번호를 붙이는 계몽 사업이 어떻게 인간의 삶과 사회를 개혁한 혁명이 되었는지에 관한 복잡한 이야기이다."(31~32쪽)

이 이야기가 바로 '주소 이야기'의 핵심이다. 로마 시대에는 지금과 같은 형태의 주소가 없었다. 우리나라는 15세기 무렵 조선시대에 오가작통법(五家作統法)과 호패법이 등장한다. 본격적인 주소 시스템은 1770년대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의 마리아 테레지아에 의해서였다. 프로이센과의 전쟁을 위해 병사를 차출하고자 집에 숫자를 붙였다. 이렇게 현대적 의미의 주소가 시작된다. 이후 주소는 주민을 대상으로 병역, 조세 및 범죄자

색출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됐다. 그런 까닭에 주소를 거부하는 풍조가 만연했다. 집에 번호를 매기는 것은 곧 자유를 박탈당하고 정부로부터 감시받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민주정치가 시작되는 20세기 들어서면서부터 주소는 선거구 책정과 투표권 확정 등 민주주의의 증진, 범죄 퇴치 및 치안 강화, 수도와 전기요금의 징수, 납세 및 병역 등에서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 무엇보다도 주소는 소속감도 준다. 내가 어느 동네에서 태어나고 자랐는가는 인간의 삶에 퍽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주소가 현대인의 필수 요소로 각인되자 이제는 사회경제적 가치로까지 그 상징성이 확대된다.

저자는 특히 뉴욕시의 조례 40%가 도로명 변경에 관한 것이라는 데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고 술회한다. 일례로 부동산 개발자인 트럼프가 새로 건물을 완성한 뒤 원래 주소인 '콜롬버스 서클 15번지'에서 '센트럴파크 웨스트 1번지'로 주소를 바꾸어 줄 것을 뉴욕시에 요구한 적이 있다. 교통 지옥인 '콜롬버스 서클'의 이미지를 벗고 센트럴파크라는 청량한 이름으로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였다. 영국에서는 '스트리트'로 끝나는 주소보다 '레인'으로 끝나는 지역의 주택이나 건물이 훨씬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레이크(lake)'가 들어간 주소지의 주택 가격이 더 높았다. 우리나라에서도 대치동과 청담동은 부와 교육과 신분을 상징한다. 반면에 인도 콜카타시(市)의 빈민촌인 '체틀라' 주민들은 주소가 없다. 집이라는 개념도 명확하지 않다. 누워서 잘 수 있는 침대 하나가 곧 집이다. 주소가 없으면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 나아가 신분 증명인 '아다르카드(Aadaar card)'를 소지할 수도 없다. 이 카드가 없으면 출산지원금, 연금, 진학, 식비 등과 같은 공공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여기에서 주소는 곧 인권과도 직결된다.

이처럼 저자가 펼치는 주소 이야기는 무궁무진하며 주소가 가져다주는 긍정적 측면은 물론 부정적 측면까지도 낱낱이 파헤친다. 주소와 정치와의 관계, 주소와 인종의 관계, 그리고 주소가 내포하는 계급과 지위의 문제도 다룬다. 주소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보편적 평등 기호가 아니다. 개인의 사회적 지위와 경험과 계급과 신분을 나누는 개별적인 기호체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디지털 주소인 이메일을 하나 이상 갖고 있다. 핸드폰은 또 다른 의미의 개별적 주소다. 세대별 주소가 아닌 개인 주소다. 핸드폰만 있다면 공원에서도 물건을 배달 받을 수 있다. 투표마저도 디지털 방식으로 구현되는 시대가 도래한다면 과연 주소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

책의 또 다른 매력은 저자의 문장력에 있다. 흡사 다큐멘터리 소설을 읽는 듯하다. 이야기를 이끄는 등장인물이 있다. 물론 실존 인물이다. 저자는 이들과 함께 각 나라 각 지역을 누비며 이야기를 풀어낸다. 마치 현장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큼 섬세한 배경 묘사는 일품이다. 실체적 체험과 통계 자료가 풍부한 것도 매력이다. 번역이 깔끔하여 읽는 재미를 더할 수 있다.

**글** 이대영(중앙대 예술대학원장)

# 민족의 고전 '목민심서' 이야기

민족의 고전 '목민심서'는 실학자 다산 정약용이 유배지 강진에서 유배가 끝나던 1818년에 탈고한 책이다. 교정과 교열을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던 관계로, 3년이 지난 1821년 3월에야 완성본으로 만들어 책의 서문을 지어 필사본으로 보관했던 책이다. 지난해 2021년이 200년이 되는 해이고, 금년으로는 201년이 되는 고전 중의 고전이다. 순전히 한문으로 된 책으로 저자의 분류로 보면 48권의 방대한 책이자, 부임(赴任)편에서 해관(解官)편에 이르기까지 12편의 체계적인 내용에, 편마다 6개 조항으로 구성해 무려 72항목의 치밀하고 정확한 통치의 방법과 사례가 열거된 공직자들의 바이블이다.

인간에 의해 역사는 만들어지고 천재적인 사상가에 의해서 어느 순간에 새로운 역사가 창조되기도 한다. 1712년 프랑스에서는 장 자크 루소가 태어나고, 그가 50세이던 1762년에 '사회계약론'을 출판한다. 그해 조선에서는 다산 정약용이 태어나고, 그가 57세인 1818년 '목민심서'가 탈고되는데, 독일에서는 그해 칼 마르크스가 태어난다. 1789년 28세의 다산은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살이를 시작하는데, '사회계약론'의 영향으로 프랑스혁명이 발발해 세계사에 큰 변혁이 일어났다. 1867년에는 마르크스가 50세의 나이로 '자본론' 첫 권을 간행하여 세계역사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사회계약론'과 '자본론'은 세계를 뒤흔든 저서였는데, 다만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저술된 책이라는 이유로 '목민심서'는 전혀 세계사를 움직이는 책이 되지 못했고, 조선에서조차 정책에 반영되는 각광을 받지 못하고 말았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망해가던 조선의 탐관오리들은 자기들에게 약이 되고 나라에 피가 되는 '목민심서'는 철저히 외면하여 부패와 타락을 멈추지 못하고 끝내는 나라가 통째로 일본에 먹히는 불행을 당하고 말았다. 오호 통재로다! 이렇게 통탄스러운 일이 어디에 또 있겠는가.

서양의 학자와 사상가에 비교해 부족함이 없는 조선의 실학자가 크게 빛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 여기에 느낀 바 있어 '목민심서'의 선구적인 사상으로 온 국민이 무장하고 모든 공직자들이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기만 한다면 나라다운 나라가 되고 인간다운 인간이 인간답게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올 것을 확신하면서 '목민심서' 읽기를 그렇게도 절절하게 권장하고 추천해왔지만,

우리 '다산연구소'의 노력은 큰 효과를 보지 못해 안타까움은 계속되고 있다. 이제라도 더 많은 국민들이, 더 많은 공직자들이 '목민심서'를 읽어서 실천에 옮길 것을 바라면서 '목민심서'의 선구적인 생각과 사상을 되짚어보고 그 가치가 극대화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다산은 한 지역을 통치하는 지방관을 목민관이라 호칭하고, "목민관은 백성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존재한다(牧爲民有也)"라고 못박고, 통치자들의 부귀호강을 위해서 백성들이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뜯어고치는 일부터 시작한 책이 '목민심서'다. 문과에 급제하고 집에 돌아온 다산은 앞으로 공직생활에 대한 각오를 읊는 시 한 수를 지었다. 그 시에 '공렴원효성(公廉願效誠)'이라는 구절이 있다. 공(公: 공정·공평·공익)과 염(廉: 청렴)으로 정성을 다해 백성들을 섬기는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한 내용이었다.

그런 생각을 지닌 다산은 '목민심서'에서 자신이 공직자로서 공정하고 청렴하게 행했던 사례를 열거하고, 옛날 조선이나 중국의 어진 목민관들이 행했던 공정과 청렴의 정치를 열거한 사례집으로 책을 꾸몄다. 이론이나 관념의 책이 아니라 실제 어떤 행정이 공정하고 청렴한 행정이었던가를 예시해 그렇게만 실천하면 공정하고 청렴한 세상이 된다는 본보기를 보여주는 책이었다.

임지에 부임한 목민관의 공무 시작은, 관내 유지들을 모아놓고 그들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숨김없이 말하라고 권하고, 그들이 말한 내용이 민생을 괴롭히는 적폐라면 과감하게 청산하는 일부터 시작하라고 했다(莅事). 둘째, 목민관의 상관이자 감독관인 암행어사나 관찰사가 부정이나 비리를 저지르면 지체없이 상부에 보고해 잘못을 바로잡는 내부고발자의 역할을 하라고 주장한다(禮際). '내부고발자보호법'의 완비를 통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조치까지 요구했다. 셋째, 상관의 명령이 공법에 위반하고 민생에 해를 끼치는 경우라면 절대로 따라서는 안 된다고 했다(禮際). 넷째, 통치자나 목민관이 백성을 괴롭히는 경우에 백성들이 관의 잘못에 항의하지 않기 때문에 밝은 정치가 행해지지 못한다면서 잘못하는 관에 항의할 수 있는 국민저항권은 반드시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다산의 200년 전 사례가 아직도 제대로 실천·실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21세기에 해당하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는 계속 신장해나가되, 19세기의 사례에 미치지 못하는 오늘의 부정·부패·불공정의 현실은 하루 속히 청산해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 일이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사회계약론'·'목민심서'·'자본론'은 누가 뭐라해도 인류의 위대한 유산이자 훌륭한 고전이다. 고전을 읽고 거기에서 배울 수 있는 지혜가 바로 역사발전의 추진력이고, 그래서 고전이야말로 바른 세상을 이룩할 인류의 유산이다. 썩은 세상을 깨끗한 세상으로, 낡고 오래된 나라를 새로운 나라로 개혁하자는 뜻에서, 공정과 청렴을 실천 목표로 내세워 치밀한 내용을 아우른 '목민심서'라는 고전은 오늘 우리가 새롭게 읽어야 할 책이다.

공자는 일찍이 말했다.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일은 오직 '호고(好古)'다. 여기서의 호고가 바로 옛날의 고전을 좋아한다는 뜻이다. 옛것을 좋아하고, 옛것을 읽어야 과거를 이해하고, 과거를 이해해야 현재를 이해하고 현재를 알아야 미래를 짐작할 수 있다. 우리 모두 목민심서를 읽고 실천해 공정하고 청렴한 세상을 만들 때가 지금이다.

**글** 박석무(다산연구소 이사장, 우석대 석좌교수)

#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의 국회 승인

1993년 8월 12일 오후 8시 김영삼 대통령은 헌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해 금융실명제 실시를 전격 발표했다.

금융실명제는 건국 이후 최대의 금융사기사건으로 불리는 이른바 '장영자 어음사기 사건'을 계기로 1982년 입법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유보되어 오다 1992년 대통령선거에 실명제 실시를 공약으로 제시했고,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에는 그 실천을 위한 시기와 방법의 선택만이 문제로 남겨져 있었다. 이후 국민들과 시장에 미칠 혼란을 우려해 첩보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비밀리에 준비 작업을 거쳐 대통령의 긴급명령으로 공포, 시행하게 된 것이다.

대통령의 긴급명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계속적으로 법률적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제14대국회 제163회 임시회는 5일간(1993. 8. 16.~20.)의 회기로 이의 심의와 처리를 위해 대통령의 요구로 소집된 것이다.

당시 금융실명제 실시 방침은 여야 모두의 당론이었고 야당인 민주당조차 '다소 때늦은 감은 있으나 환영한다. 비판은 하되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한 상황이었기에 국회에서 만장일치 승인이 당연시되었다. 1993년 8월 16일 열린 제163회 국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이만섭 국회의장은 금융실명제 조치를 바탕으로 경제의 재도약을 이루는 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국회가 중지를 모아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O의장 이만섭** 개혁을 시대적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 국회는 이제 이번의 금융실명제 조치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결실을 맺어 개혁완수의 진정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중지를 모아 훌륭한 결론을 도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개회식 직후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황인성 국무총리는 국회 보고를 통해 대통령 긴급명령의 목적이 금융실명제 실시로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와 조세정의를 확립해 정치·경제의 선진화를 이루자는 데 있으므로 국회에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O국무총리 황인성** 이 역사적인 제도개혁 조치가 이 나라 이 사회를 바로세우는 일대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긴급명령을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8월 14일 재무위원회에 회부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승인의 건은 8월 17, 18일 이틀간 재무위원회를 열어서 그 실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고, 8월 18일 2차 재무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했다. 의결을 마친 후 노인환 재무위원장은 안건 심

의 과정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실히 담아 본회의에 보고하겠다며 금융실명제의 원활한 실시와 조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정부 측에 당부했다. 또한 최두환 위원의 동의(動議)로 개의한 8월 25일 3차 재무위원회에서는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문제들을 같이 고민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민자당 5인, 민주당 3인, 무소속 1인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재무위원회 심사를 마친 긴급재정경제명령 승인의 건은 8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노인환 재무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토론에 들어갔다. 먼저 찬성 토론에 나선 민자당의 이상득 의원은 "금융실명제가 실시되면 각종 비리가 원천적으로 봉쇄됨은 물론 금융거래가 정상화되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할 수 있으며 앞으로 추진할 각종 제도개혁의 기초가 될 것"이라면서 금융실명제 실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만장일치로 승인해 줄 것을 당부했고, 민주당의 김원길 의원은 민주당의 오랜 여론에 따라 금융실명제를 찬성하지만 "명령 발동으로서 하는 절차를 지켜볼 때 경제적인 논리보다 정치적인 논리가 훨씬 우선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면서 경제부처의 세심한 정책적 보완과 국회의 정상적인 입법활동에 의한 대체입법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토론을 마친 후 표결에 들어간 이만섭 의장은 두 여야 의원이 찬성 입장에서 토론을 했으므로 이의 유무를 물어 만장일치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하려 했다. 이때 김동길 의원이 의석에서 "만장일치 아니에요. 여기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라고 해 찬반 의사를 묻는 기립 표결에 들어갔고, 표결 결과 재석 269인 중 김동길 의원 반대 1표를 제외한 268인의 찬성으로 승인이 되었다.

**○의장 이만섭** 그러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승인의 건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만장일치로 승인…

(○김동길 의원 의석에서 - 만장일치 아니에요. 여기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반대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동길 의원 한 분만 반대하시고 나머지 분은 이 긴급재정경제명령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것으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중략)

그러면 김동길 의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268인)은 모두 찬성하시므로 이 긴급재정경제명령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일한 반대표를 행사했던 김동길 의원은 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위헌 소지 등의 문제점이 있어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알리려 했다고 한다.[1)] 정책의 긴급성이 인정되어 금융실명제 실시에 적극 협조한다는 여야의 합의하에 본회의에서 승인된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한 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만장일치라고 생각된다.

**글** 이규진 서기관(의사국 의정기록2과)

1) 국회보 2017. 8. p79

# ‘중앙아시아의 나폴레옹’ 티무르(Timur)

14세기 중엽 몽골 제국의 뒤를 이어 세계적인 대제국을 건설한 티무르(Timur, 당시 투르크어식 표현으로는 ‘테뮈르’)는 현재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아미르 티무르’라고 불리며 우리나라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을 합쳐 놓은 듯한 민족의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 남부 도시 사마르칸트에는 티무르와 그의 후손이 세운 국가적인 시설과 건축물들이 남아 과거 티무르 제국의 영화를 보여준다.

티무르의 정치적 부상은 당시 사분오열되어 있던 몽골 제국의 정치적 상황 속에서 가능했다. 몽골 제국 치하 중앙아시아 지역은 칭기즈칸의 둘째 아들 차가타이의 후손들이 통치하고 있었다. 중앙아시아 남쪽에 위치한 도시 샤흐리사브즈(Shahrisabz)에서 태어난 티무르는 당시 차가타이 칸국을 구성하던 여러 몽골-투르크계 부족 가운데 하나였던 바를라스(Barlas) 부족 출신의 귀족이었다. 몽골 제국을 건설한 칭기즈칸은 이미 ‘신이 선택한 세계 정복자’로서 인정받고 있었고, 그의 후손들은 특별한 존재로 여겨졌다. 그에 비해 티무르 가문은 당시 바를라스 부족을 통할하던 부족장 씨족에도 들지 못할 만큼 초라했다. 하지만 몽골 제국 말기 부족들의 반란은 군주권을 약화시켰고, 결국 1345년 차가타이 칸국의 군주 카잔 칸(Qazan Khan)이 반란군에 살해당하면서 차가타이 칸국은 몰락하고 만다.

## 특유의 카리스마와 뛰어난 용병술로 지지자들 결집

이러한 상황에서 하층 귀족 출신이었던 티무르는 처음에는 다른 투르크계 유목부족장들 휘하에서 장수로 복무한다. 그러다가 바를라스 부족의 부족장 지위를 얻기 위해 기존 부족장 세력에 도전하게 된다. 처음에는 티무르가 패배해 오늘날 이란 북동부 지역으로 도주한다.

당시 티무르는 도적질로 연명할 수밖에 없었다. 하루는 양을 훔치다가 다리를 크게 다치게 된 티무르는 이후 다리를 절게 된다. '절름발이 티무르'라는 뜻의 페르시아어인 티무리 랑(Timur-i Lang)이라는 호칭은 이후 티무르가 세계 제국을 건설한 이후에도 유럽에도 전해져 테멀레인(Tamerlane)이라는 영어식 표기가 굳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고초 끝에 티무르는 특유의 카리스마와 뛰어난 용병술로 점차 지지자들을 결집하기 시작했다. 1366년에는 바를라스 부족장 아미르 후세인(Husayn)을 무찌르고 스스로 부족장의 자리에 올랐다. 이후 바를라스 부족 뿐 아니라 주변 부족들을 점차 규합하면서 차가타이 칸국 전역을 통치하기에 이른다. 비록 차가타이 칸국을 무력으로 장악했지만, 티무르는 결정적으로 칭기즈칸의 후손이 아니었고, 따라서 '칸'이라는 칭호를 사용할 수 없었다. 칭기즈칸의 후손이 아니라는 정치적 결함을 극복하기 위해 티무르는 크게 세 가지 해결책을 모색했다.

## 칭기즈칸 후손 아니라는 정치적 결함 극복 위한 방안 모색

첫째, 다양한 정치적 상징을 스스로 부여했다. 티무르는 칭기즈칸 자손의 후광을 입고자 칭기즈칸 후손의 딸과 결혼하고, 군주의 사위를 뜻하는 '부마(駙馬)'라는 뜻의 몽골어 '귀레겐'의 투르크식 표현 귀르칸(Gurkan)이라는 칭호를 취했다. 또한 그는 차가타이 칸국의 마지막 칸이었던 카잔 칸의 후손 가운데 한 명을 꼭두각시 '칸'으로 옹립하고 그의 이름으로 조칙을 반포하여 자신의 정통성 부재를 불식시키려 했다.

둘째, 문화적인 상징을 적극 활용했다. 당시 뛰어난 학자들을 모아 역사를 편찬하면서 그의 선조와 칭기즈

칸의 선조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페르시아-이란의 점성술에서 강조하는 "3개 행성들이 만날 때 태어나는 영웅호걸"이라는 뜻의 '사힙 키란(Sahib Qiran)'이라는 칭호를 취했다. 이외에 이슬람의 종교 수도사에 해당하는 수피(Sufi) 지도자들을 적극 후원해 이슬람의 보호자를 자처했다. 티무르는 자신의 정치적인 구호로 '옳음이 힘이다(Rasti rusti)'라는 문구를 강조했는데, '진실'과 '정의' 같은 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권력의 기반으로 삼으려 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티무르는 언제 반란을 일으킬지 모르는 유목 집단들의 환심을 사고자 끊임없는 정복 전쟁을 벌였다. 몽골 세계 정복의 원동력이었던 몽골-투르크계 기마 군단을 재건하고, 당시 몽골 제국의 번영을 통해 부를 축적한 세계 각지를 공격하여 재화를 탈취했던 것이다. 그의 대표적인 원정으로 1380년대 이란 지역, 1394~1395년 러시아 남부, 1398~1399년 인도 북부, 1400~1402년 시리아와 아나톨리아 지역의 정복전쟁을 들 수 있다. 이를 통해 몽골 제국의 후예인 톡타미시 칸(Toqtamish Khan)과 오스만 제국의 술탄 바예지드(Bayezid)를 격파하는 전공을 올렸다. 티무르의 마지막 원정 목표는 중국의 명

나라였으나, 이를 실행하지 못하고 행군 도중 1405년 사망하고 만다.

비록 티무르의 정복은 자신의 통치권을 강화하고 유지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전쟁의 파괴와 문화의 발전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결과를 낳았다. 티무르군이 저지른 파괴와 살육에 관해서는 무슬림 지역 및 유럽에도 기록이 전해져 다양한 르네상스 문학 및 예술 작품의 소재가 되었다.

하지만 티무르가 건국한 티무르 제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 발전을 이룩했다. 티무르가 정복과정에서 세계 곳곳의 기술 인력을 사마르칸트에 집결시킴으로써 사마르칸트의 건축물들이 탄생할 수 있었다. 티무르의 손자 울룩벡(Ulugh Beg)은 사마르칸트 외곽에 천문대를 지어 천문학의 발전을 이룩했다. 당시 티무르 궁정 내에서는 페르시아어 문학 및 역사 편찬이 활발히 이루어졌고, 미술 역시 발전했다. 이를 두고 학자들은 '티무르조의 르네상스(Timurid Renaissance)'라고 일컫는다.

위) 사마르칸트에 있는 티무르의 무덤 구레아미르
아래) 사마르칸트에 티무르가 세운 비비하님 모스크

## 우즈벡어의 전신 격인 투르크어 문어 차가타이어 문학 발전시켜

한편 티무르조의 르네상스는 또 다른 중요한 문화 발전을 초래했다. 바로 우즈벡어의 전신 격인 투르크어 문어인 차가타이어 문학의 발전이다. 티무르조의 정치가이자 문학가인 알리셰르 나바이(Ali Sher Navai, 우즈벡어 발음으로는 나보이)는 차가타이어 창작 문학으로 오늘날 우즈벡어 문학의 아버지로 불린다. 또 다른 차가타이어 문학 작품의 정수인 '바부르 나마(Babur Nama)'는 티무르의 5대손으로 인도 무굴 제국(Mughal Empire)의 창시자 바부르(Babur)가 쓴 작품이다. 티무르 제국의 영향력은 중앙아시아를 넘어 인도에까지 이르렀던 것이다.

이렇게 티무르는 몽골 제국 붕괴 이후 혼란스러운 국제 정치 질서 속에서 세계적인 제국을 건설했다. 왕족이 아니면서도 뛰어난 능력으로 새로운 정치 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세계에 맞선 나폴레옹을 연상시키는 티무르의 삶은 파괴와 재창조라는 세계사의 테마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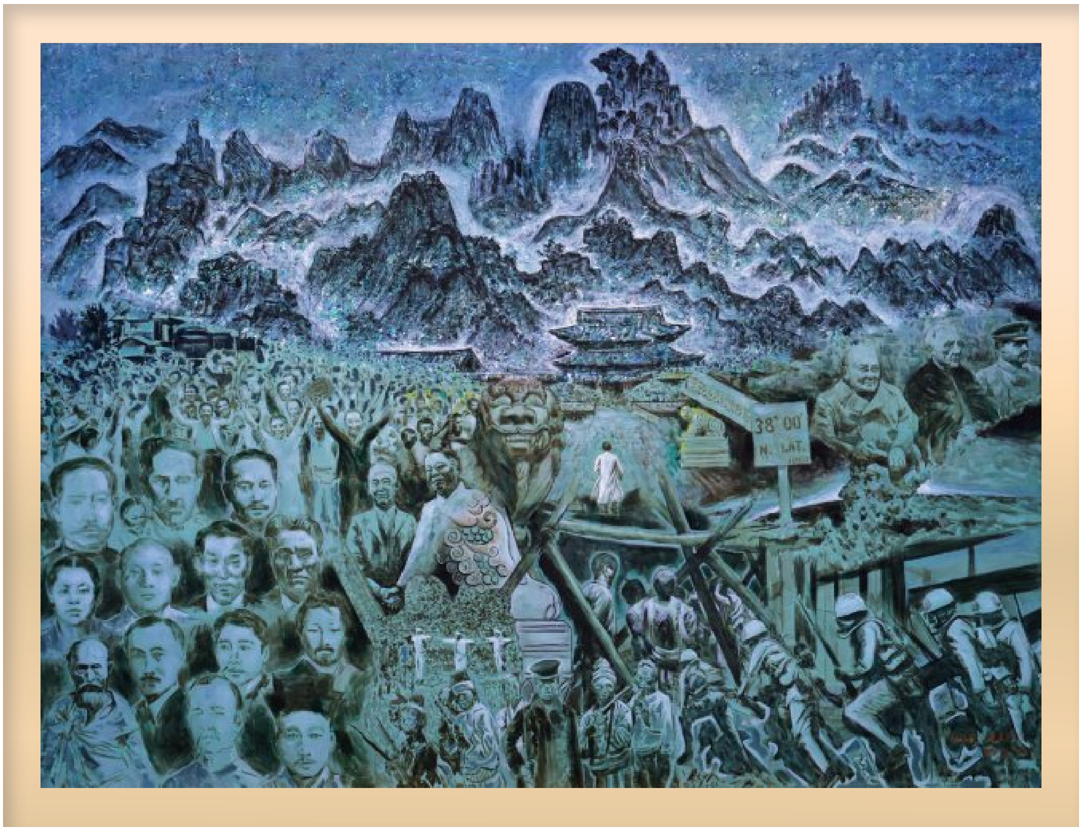
**글** 이광태(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 HK연구교수)
**일러스트** 윤소영(soyoungyun.com)

# 무궁화

국회 잔디광장에 활짝 핀 무궁화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꽃인 무궁화는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꽃’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8월은 무궁화꽃이 절정을 이루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8월 8일은 ‘무궁화의 날’의 날이라고 하는데, 무궁화에 대한 인식을 확실히 하고, 이를 가꾸고 사랑하자는 뜻에서 2007년 민간단체에 의해 제정됐습니다. 숫자 8을 옆으로 눕히면 ‘무한대(∞)’가 되는데, 무궁(無窮)을 상징한다는 의미로 ‘무궁화의 날’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글** 윤성혜 **사진** 김진원



민정기, '대한민국건국', 290×217, 캔버스에 유채, 1997

# '대한민국건국' 민주공화국 탄생의 거대서사

근대국가의 성립은 민족이라는 단위를 재구성하는 과정과 그 결과에 뿌리를 둔다. 한반도의 비극은 민족국가라는 근대정치의 보편성을 획득하지 못했다는 점에 기인한다. 식민지배 이후 지금까지 분단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한반도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탄생한 배경과 과정은 복잡다단하다.

민정기는 그것을 한 장의 그림에 담아냈다. 경복궁 근정전을 중심에 놓고, 그림 상단부에는 서울 경복궁의 뒷산인 북악산과 북한산을 시작으로 아련하게 이어지는 한반도의 산맥들이, 하단부에는 인물의 흐름, 즉 인맥이 펼쳐진다. 좌측에는 대한민국 건국을 주도한 인물들, 김구와 이승만을 비롯해 김좌진, 유관순, 이봉창, 윤봉길, 안창호, 안중근 등 건국의 초석을 다진 독립운동가들이, 우측에는 미·영·소 국가 지도자들과 분단, 원자폭탄, 중일전쟁 등의 역사적 인물들과 사건들이 등장한다.

대한민국의 건국 서사를 펼친 이 거대한 파노라마에는 조선시대 인물 3인도 등장한다. 맨 앞줄 가운데에는 조선의 관료 민영환이 있다. 1905년의 을사늑약을 목도하고 자결로써 망국의 한을 드러낸 인물이다. 다른 두 인물은 동학 지도자인 최제우와 최시형이다.

동학은 서학이라는 이름의 서구 문명 열풍에 맞서 유교와 불교, 도교의 교리를 재정립한 것으로서 쇠락해가는 조선 말기에 국가체제의 내적 갈등과 외세의 침탈에 맞선 종교이자 사상이다.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 사상을 바탕으로 전근대적인 신분제도와 남녀차별 등을 극복하고자 한 동학의 평등사상은 왕정의 끝자락에서 민주공화국의 문을 열어젖힌 마중물이고자 했다.

## 대한민국 건국의 밑거름으로 동학사상 제시

민정기는 동학의 창시자인 최제우와 2대 교주 최시형을 대한민국 건국의 밑거름으로 제시한다. 동학사상에 담긴 민주주의와 인권, 평등의 가치를 민주공화국의 정신적 기초로 삼고자 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으로서의 지위가 동학정신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생각은 이 그림을 제작한 시점인 1997년의 사회적 분위기를 알려준다. 갑오농민전쟁 100주년이었던 1994년을 기점으로 한 학술과 예술 영역의 동학 재조명 운동에 참가했던 민정기는 건국을 정초한 인물들의 제일 앞줄에 동학 지도자를 배치했다. 근대적 민주공화국의 단초를 동학사상에서 찾고자 하는 그의 생각은 130주년을 앞두고 동학사상이 재조명되고 있는 근간의 움직임으로 이어진다.

조선과 대한제국, 일제강점기와 해방공간을 거치면서 종교와 정치, 독립운동을 펼친 인물들의 주위에는 무명의 독립운동가들과 가혹한 탄압, 중일전쟁과 원폭 등의 이미지가 중첩된다. 구한말의 독립운동과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은 수없이 많은 조선인들의 죽음으로 이어졌다. 제국주의 침탈이 전지구적으로 펼쳐지던 시기에 국가라는 기구를 제대로 꾸리지 못해 제국의 식민지배를 받아야 했던 조선이라는 망국은 수많은 죽음을 야기했다. 그러나 그 기나긴 암

흑기에도 열사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한줄기의 빛을 잃지 않았다. 민정기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참혹한 희생과 죽음을 배경으로 식민지 조선은 광복을 맞이했고, 분단 체제 아래서 건국에 이르렀다. 동학에서 독립운동으로 이어지는 외세 침탈에 맞선 항쟁이 건국의 힘이었음을 상기시키는 대목이다.

그 위에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탄생의 배경을 만든 세계사적인 사건과 인물들이 등장한다. 얄타회담의 세 지도자 처칠과 루스벨트, 스탈린이 동석한 장면은 제2차세계대전 종식과 세계 질서 재편의 상징이다. 2차대전 종전을 앞둔 1945년 2월에 열린 얄타회담은 연합국의 미국·영국·소련 수뇌부가 모여서 전후의 새 체제를 논의한 자리다. 그것은 소련의 대일본 전쟁 참전으로 향후 한반도의 분단을 예고한 사건이며, 20세기 후반을 지배한 냉전 체제의 계기이기도 하다. 일제로부터의 해방이 자력에 의한 것이 아니었고, 패권 대립에 따른 분단 체제가 국가 성립의 전제 조건이었다는 뼈아픈 과거를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인물 사진 바로 아래에 배치한 38선 경계 푯말은 열강의 패권주의와 한반도 분단을 연결하는 상징적인 이미지다. 대한민국 건국은 미국과 소련이라는 패권의 대립이 한반도의 분단과 건국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분명하게 짚어두는 대목이다.

국회 본관 중앙홀 5층에 걸려 있는 '대한민국건국'

## 역사적 질곡 딛고 선 대한민국 건국 조명

제국과 식민, 냉전과 분단의 길을 걸어온 20세기 한국사를 거대서사로 조망한 이 그림에서 마지막으로 주목할 만한 것은 화면 정중앙에서 등을 돌린 채 경복궁 근정전과 그 뒤편의 산맥을 바라보고 있는 인물이다.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이 거대한 서사를 갈무리하는 핵심 인물이 앞으로 걸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등을 돌리고 조선이라는 과거의 상징인 근정전을 향해 걸어가는 역설적인 모습이다.

1948년을 건국 원년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상해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의 기원으로 볼 것인지는 역사 해설에 따라 관점을 달리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 건국이 그 이전의 역사적 질곡을 딛고 서 있다는 점이다. 민정기는 건국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당대의 현실만이 아닌 역사적 조건에 대한 성찰로 갈음하고 있다. 그것은 100여년 전의 망국과 독립운동, 70여 년 전의 해방과 건국이라는 역사적 사건들이 뒤엉킨 혼돈으로부터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지켜온 새로운 역사에 대한 헌사다.

글 김준기(미술평론가)

대한민국임시의정원 개원 103주년 기념

#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 국회박물관 개관

국회박물관
NATIONAL ASSEMBLY MUSEUM

## 국회체험관

국회의 기능과 역할 소개 및 의정체험
국회박물관 오리엔테이션

## 1전시실

3·1운동 이후 중국 상하이에서
개원한 임시의정원의 활동과 성과

## 2전시실

제헌국회에서 제9차 개헌(제12대 국회)까지 국회가 걸어온 길

## 3전시실

제9차 개헌 이후 국회(제13대국회~제21대국회)의 변화와 성과
확대된 정치 참여와 민주주의의 발전

## 4전시실

역대 의장의 발언을 통해 민주주의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국회를 보여줌

## 기획전시실

국회의 역할과 구성

어린이박물관
CHILDREN'S MUSEUM

**우리가 만드는 국회 규칙놀이터**

어린이 국회에서 놀이터의 법을 만들고
지키는 과정에서 배우는 국회와 민주주의

운영시간 | 월~금 10:00 - 18:00
토 10:00 - 13:00
정기휴관 | 법정공휴일
관 람 료 | 무료
관람방법 |
•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 자유 관람
• 국회체험관, 어린이박물관 : 사전 예약
※「국회 방문·참관예약 시스템」을 통해 예약 가능
(https://reservation.assembly.go.k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세부 요소로 본 우리 건축의 특징

# 한국의 창

## 가족살이를 반영한 편안하고 아름다운 사실주의 구성미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들 한다. 마음이라는 내면의 상태가 밖으로 드러나는 통로라는 뜻이다.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하나는 통로라는 구멍이 있어야 하고, 다른 하나는 내부가 가감이나 각색 없이 외부에 그대로 반영되어야 한다. 마음이 맑으면 눈도 맑고, 마음이 슬프면 눈도 슬퍼진다. 신기하게도 이 두 조건은 그대로 건축에서 창의 기능에 해당한다. 건물에서 '창은 실내의 상태를 반영하는 거울'이 된다.

창이 반영하는 실내의 상태는 다양하다. 창이 있는 곳은 방이 있게 되니 우선 방의 배치 구성을 반영한다. 창의 개수와 배치는 실내에 있는 방 사이의 관계를 반영한다. 방 사이의 관계는 곧 그 속에 사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반영하는 것과 같다. 창의 위치와 크기는 의외로 세상을 향한 가치관을 반영한다. 이처럼 창은 많은 걸 담아내며, 창을 통해 많은 걸 읽어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실내와의 관계나 가치관 등 해석의 내용을 떠나서 순수하게 건물 입면(立面)만 보았을 때 아름다운 조형미를 만

안동 하회마을 양진당

안동 도산서원 농운정사

들어낸다. 감성의 영역까지도 빠지지 않고 섬세하게 감당한다. 창은 이처럼 생각보다 하는 일이 많고 중요하다.

우리 건축은 창의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대표하는 최고의 걸작이다. 그중에서도 흰 회벽을 건물의 바탕 면으로 갖는 한옥이 단연 백미(白眉)다. 한옥의 입면은 정갈하고 담백하여 추상의 진수를 보여준다. 흰 바탕 면 위를 가로지르는 보와 기둥의 갈색 선만으로 구성되는 한옥의 입면은 목구조가 이 정도로 순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백의민족(白衣民族)이라는 말과도 잘 어울리는 건축이다. 이런 장면은 거의 모든 한옥에 다 나타나는데 도산서원의 기숙사였던 농운정사와 '류중영-류운룡' 부자의 고택이었던 양진당이 더욱 돋보인다.

농운정사는 퇴계 선생이 유생들을 위해 지은 기숙사답게 그 구성이 정말 오묘하다. 창이 여덟 개인데 같은 것이 없다고 봐도 좋을 정도로 형태, 크기, 위치 등에서 제각각이다. 여덟 개를 조합한 경우의 수도 그렇다. 양진당은 더하다. 여섯 개의 창이 조합조차 하지 않고 모두 다른 모습으로 한 칸에 하나씩 차지하고 있다. 요즘 건물

에서는 보기 힘든 자유로운 구성이며 우리 건축의 정수를 보여준다. 이 속에 앞에 설명한 창의 일반론이 다 들어있다. 그냥 들어있는 정도가 아니고 이 여러 가지 내용이 서로 합심해서 유기적으로 작용한다. 그 의미를 셋으로 요약할 수 있다.

## 한옥 '창'의 세가지 의미

첫째, 건축적 사실주의다. '창을 왜 이렇게 제각각 냈을까'라는 질문부터 시작해 보자.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각 방의 사정이 그렇고 저렇기 때문이며 창은 여기에 맞춰 낸 것이다. 이 간단한 답 속에 '사실주의'라는 위대한 지혜가 숨어있다. 사실 건물은 곧 생활공간이기 때문에 건축에는 사실주의라는 사조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 반면 아파트, 고층 건물, 학교 등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거의 모든 건물을 보면 공간 구성이 먼저 정해지고 사람이 거기에 맞춰야 해서 사실주의가 심하게 훼손되고 있다.

농운정사와 양진당은 이런 현실을 거꾸로 생각하면 된다. 각 방에서 생활하는 식구들의 일상 현실을 우선시해서 그 요구에 맞춘 데 따른 결과라는 뜻이다. 지금 우리가 사는 건물과 반대다. 요즘 건물은 건물이 먼저이고 사람과 생활이 나중인데 우리 한옥은 그 반대로 사람과 생활이 먼저이고 건물이 나중이다. 그래서 사실주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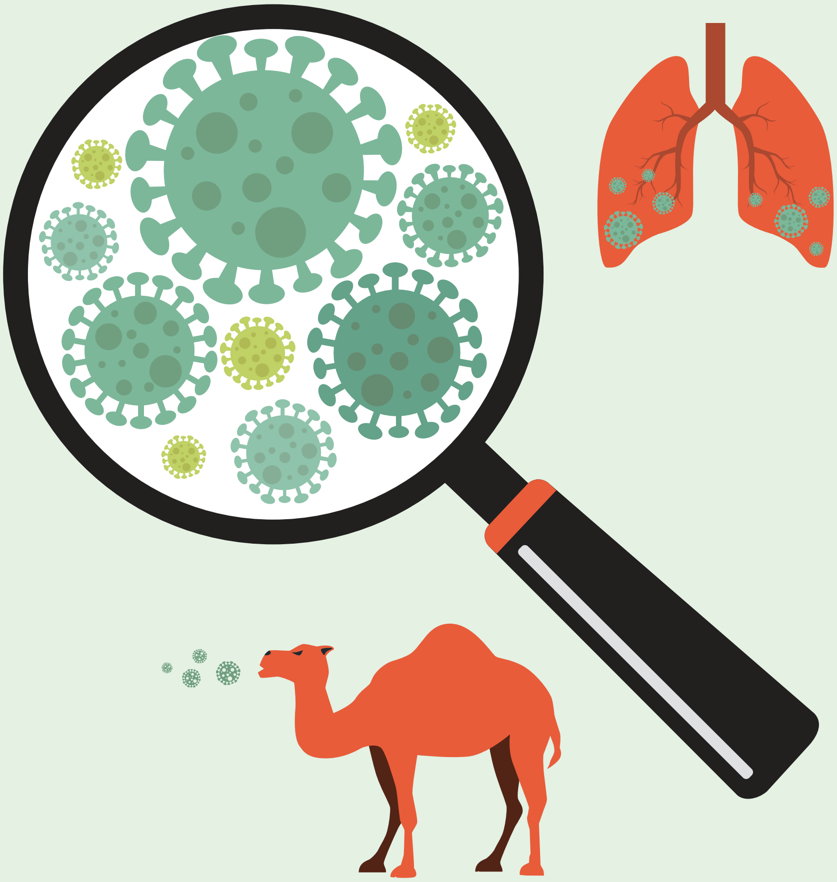
둘째, 비대칭의 미학이다. 앞에 '건물이 먼저'로 예를 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건물은 대부분 강한 대칭 구성으로 이루어진다. 대칭과 함께 반복의 미학이 지배하며 이는 동일성으로 악화한다. 물론 '대칭-반복-동일성'도 그 나름의 미학이 있다. 질서와 규칙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문제는 이런 건물들만 넘쳐난다는 데에 있다. 앞에서 말한 사실주의를 해친다는 말의 조형 버전에 해당한다.

비대칭은 이런 위험 대신 은근함, 균형감, 흥겨움, 리듬감, 자유로움, 상상력 등의 장점이 있다. 농운정사와 양진당을 보면 여러 창이 제각각이면서 동시에 혼란으로 흐르지 않는 은근한 균형감이 돋보인다. 제각각의 창은 마치 어린 자식들이 방 안에서 흥겹게 뛰노는 모습 같아 보인다. 그 흥겨움은 리듬을 타고 있다. 보는 사람이 구성 요소를 머릿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각자 취향에 따라 자유롭게 조합하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다. 이처럼 두 건물의 창 구성을 설명하는 말 속에 '은근함-균형감-흥겨움-리듬감-자유로움-상상력'의 단어들이 차례대로 나왔다. 마지막으로 이걸 다 모으면 '다양성'이 된다. 밥 한 끼를 먹어도 나물 몇 종류는 섞어 비비는 우리 민족 특유의 다양성의 미학이다.

셋째, 어울림의 미학이다. 대칭과 대비해서 보자. 대칭은 질서고, 이것이 발전한 반복은 규범이다. 다시 이것이 극단화된 동일성은 억압이다. 수많은 인간 욕망이 충돌하는 사회에 물론 모두 필요한 것들이다. 그러나 이 사이에서 조금 편안하게 숨 쉴 틈은 없는 것일까. 있다. '어울림'이다. 개체가 존중받고 그 개체들은 다시 자발적으로 주변과 손잡고 나누는 비정형의 질서를 말한다. 인간사와 인류문명이 양면적이듯이 '대칭-반복-동일성'의 정형 질서 옆에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하는 숨통의 미학이다.

우리 한옥의 창 구성이 그렇다. 농운정사를 보자. 중간의 두 창문은 마치 어미가 새끼를 안고 업고 있는 형국이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사랑을 능가하는 어울림은 없다. 양진당은 좀 더 직설적이다. 그냥 식구 여섯 명이 각자 방에서 자유롭게 생활하는 모습을 그대로 옮겨 놓았다. 이 또한 어울림에서 또 다른 최고의 경지다. 두 건물 모두 창 구성이 가족살이를 말하고 있지 않은가. 그것도 온기 넘치고 훈훈한 모습으로 말이다. 화목한 가족보다 더한 어울림이 있으랴. 가빴던 호흡이 차분히 가라앉고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진다.

**글** 임석재(이화여대 건축학과 교수)



# 2015년을 두렵게 만들었던 '메르스'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인 2015년 5월, 대한민국은 난생 처음 듣는 전염병으로 인해 혼란에 휩싸였다. 그 병의 이름은 '메르스(MERS)', 정식 명칭은 중동 호흡기 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이었다.

메르스는 베타코로나 바이러스에 사람이 감염돼 걸리는 호흡기 계통의 전염병이다. 이 베타코로나 바이러스를 사람한테 옮기는 매개체는 동물인데, 주로 중동 지역에 널리 서식하는 낙타가 그 대표적인 경우다. 특히 중동 음식인 낙타 고기를 요리하기 위해 낙타와 접촉했다가 베타코로나 바이러스가 옮아서 메르스에 감염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2015년 한국에서 메르스 증세가 보고되자, 정부는 국민들을 상대로 낙타 고기를 먹지 말라는 권고를 했다. 다만 이런 권고는 그다지 호응을 얻지 못했는데, 한국에는 낙타 고기가 유통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낙타 고기 자체를 먹어본 사람이 매우 드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베타코로나 바이러스가 반드시 낙타와의 접촉만으로 사람한테 감염되는 것은 아니다. 베타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몸 밖으로 배출한 침이나 땀 같은 타액을 만진 사람도 메르스에 감염된다. 그렇기 때문에 메르스 환자들을 수용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나 간호사도 환자와의 신체적 접촉을 통해 똑같이 메르스에 감염될 위험성을 안고 있다.

실제로 2014년 5월, 미국에서 발생한 2명의 메르스 환자들은 모두 걸프 만 지역에서 활동하다가 미국으로 돌아온 의사 같은 의료계 종사자들이었다. 그리고 2015년 5월부터 7월까지 2개월 동안 한국에서 발생한 180명의 메르스 환자 대부분도 병원 같은 의료 시설에서 메르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 사스보다 치사율 높은 메르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메르스는 호흡기 계통의 병이기 때문에 그 증상은 메르스보다 이전인 2003년에 발생했던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인 사스(SARS)와 비슷하지만, 치사율은 무려 20~46%에 달해 사스보다 더 치명적이다.

그렇다면 메르스에 감염되었을 때, 어떤 증상을 겪을까? 우선 메르스에 걸리면 약 1~2주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친 후에, 고열과 흉부에 통증을 느끼면서 기침과 호흡곤란 증상을 겪게 된다. 상태가 더 악화되면 설사와 구토 같은 소화기 계통의 질병 증상도 나타난다. 또한 신장의 기능이 손상되어 급성 신부전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가장 두려운 것은 호흡 곤란 증상이 폐렴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병원에 입원해 인공호흡기를 달고 치료를 받아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상태가 더 악화되면 끝내 목숨을 잃고 만다.

메르스를 일으키는 베타코로나 바이러스는 현재까지도 전 세계를 휩쓰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름이 비슷하지만, 노인의 사망률이 높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비해 젊은이도 노인 못지않게 사망률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메르스에 감염되었을 때 특히 위험한 사람들은 당뇨병과 심장 질환 및 신장 질환을 앓는 사람이다. 이런 증상을 앓는 사람은 메르스 감염이 치명적인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불행히도 아직까지 메르스를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는 약은 개발되지 못했다. 그저 발열과 근육통 완화를 위해 아세트아미노펜 또는 이부프로펜과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NSAID)를 투여하고, 환자가 입원한 방을 환기시키는 정도가 고작이다. 다만 메르스는 타액을 통해 감염될 수 있어서 메르스 환자가 입원한 병실에 들어가려면 눈, 코, 입을 막는 마스크와 모자와 가운을 착용하고 손에도 장갑을 껴야 한다.

그리고 메르스의 발병지인 사우디와 요르단, 이집트, 오만, 카타르 등지를 여행하는 사람들은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입을 만지는 행동을 삼가고 손을 자주 씻어 개인위생에 철저히 신경을 써야만 메르스를 예방할 수 있다.

글 도현신 작가

# 아침 햇살 찬란한 은둔의 계곡, 자유를 만끽하다

## 인제 방태산 아침가리골

방태산 계곡을 따라 펼쳐진 울창한 원시림

아침가리골. 이름만으로 울창한 계곡으로 눈부신 햇살이 떨어지는 풍경이 상상됐다. 꼭 한 번은 가봐야지, 그리고 실제로 만난 아침가리골의 풍경은 상상했던 그대로 찬란했다. 아, 저절로 탄성이 쏟아졌다.

아침가리골을 품은 강원도 인제의 방태산(1,444m)은 한국에서 가장 큰 자연림이다. 나무가 울창하고, 계곡이 깊다. 100년 이상된 아름드리 소나무와 신갈나무, 수령이 오래된 주목 등이 하늘을 향해 쭉쭉 뻗어 있다. 또 각종 야생화가 계절마다 새 옷을 갈아입는다. 한국의 '마지막 원시림'으로 불리는 곳이다. 그 숲에서는 한여름에도 서늘한 기운이 흐르고 감돈다.

방태산 깊숙한 곳에는 '삼둔사갈'이라 불리는 산마을들이 있다. 옛날 정감록에서 '난을 피해 편히 살 수 있는 곳'이라고 지칭했던 오지 중 오지다. 삼둔은 월둔·달둔·살둔 등 숨어 살기 좋은 마을이고, 사갈은 아침가리·적가리·연가리·곁가리 등 방태산 일대 4개의 깊은 계곡을 말한다.

아침가리는 사갈 가운데서도 가장 길고 깊다. 내린천을 따라 이어지는 무성한 원시림이 맑은 계곡물과 어울려 비경을 펼친다. 때묻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꾸밈없는 풍경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마저 덩달아 맑아진다.

### 점심 숟가락 놓기 무섭게 해가 저무는 골짜기

아침가리란 지명은 아침에 잠시 밭을 갈 정도의 해만 비치고 금세 져버릴 만큼 첩첩산중이라 해서 지어진 이름이라고 한다. 워낙 심산유곡이라 점심 숟가락 놓기 무섭게 해가 저문다. 그러나 산이 높고 골이 깊어 수량이 풍부하고 골짜기가 시원하기로 이름났다. 한여름에도 한기가 느껴질 정도로 시원해 여름에 특히 더위를 피한 발걸음이 많다.

아침가리골 트레킹 코스는 진동리 갈터마을에서 아

침가리골을 따라 조경동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원점 회귀 코스(6시간)가 있고, 방동약수를 출발점으로 삼아 아침가리골로 들어가 진동리로 나오는 코스(4시간)가 있다. 보통 왕복코스가 부담스러워 두 번째 코스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다. 아예 차를 진동리에 세워두고 방동고개 정상까지 택시를 이용하는 방법은 좀 더 수월하다.

방동약수를 들머리로 한다. 포장된 산길을 약 3km 오르면 꼬부랑 고개로 불리는 방동고개 정상이다. 차량이 들어올 수 있는 마지막 구간이다. 택시를 이용하면 금방이다. 이곳에서 비포장 숲길을 따라 2km 내려가면 조경동 다리가 나온다. 여기가 바로 6km에 이르는 아침가리골 아쿠아 트레킹의 출발점이다.

조경동(朝耕洞)은 아침에 밭을 갈아야 하는 곳, 아침가리를 의미한다. 한때 화전민 200여 가구가 모여 오순도순 밭을 일구고, 약초를 캐며 살았다고 한다. 다들 떠나 아무도 살지 않았던 곳에 몇 해 전부터 한두 가구가 들어와 살고 있다. 마을로 이어지는 조경동 다리 아래로 내려서면 본격적인 트레킹이 시작된다.

이곳에서부터는 잠시 속세와의 끈을 내려놔야 한다. 휴대폰도 터지지 않는다. 사방팔방 하늘을 덮은 산과 울창한 숲, 그리고 끝없이 흘러가는 물줄기뿐이다. 아침가리에서는 길을 잃을 일이 없다. 물줄기를 따라 계곡을 걸으면 그것이 길이 된다. 그렇게 걷고 또 걷다 보면 길은 진동마을까지 이어진다.

아침가리골이 주는 최고의 선물은 트레킹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이곳에서 누릴 수 있는 트레킹은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트레킹과 많이 다르다. 물 위를 걸어가는 아쿠아 트레킹이다. 색다른 재미를 즐기려면 좀 과감해야 한다. 물에 젖지 않으려고 조심조심하거나 등산화를 벗어 손에 들고 맨발로 건너는 것은 위태로울 때가 많다. 과감하게 신발을 신고 첨벙첨벙 계곡을 건너는 게 정석이다. 물에 젖더라도 웬만하면 등산화를 신는 편이 좋다. 물길과 돌길을 걷고 또 걸어야 하기 때문에 물에 젖더라도 그냥 신고 걷는다. 등산화가 물에 흠뻑 젖는 것이 부담되지만 물을 건널 때의 시원한 기분은 그 이상의 기쁨을 주고도 남는다. 아예 물속으로 풍덩 뛰어들어도 된다. 그것이 계곡 트레킹의 묘미이자 특별한 추억이 된다. 계곡을 수없이 건너야 하기 때문에 여벌 옷이나 등산화를

아침가리 계곡에서 만난 자작나무숲

신나는 아쿠아 트레킹

준비하는 것도 잊지 말자.

## 첨벙첨벙, 물 위를 걷다

수심이 깊으면 계곡 트레킹으로 적합하지 않다. 위험할뿐더러 그리 되면 걷는 것이 아니라 헤엄을 쳐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침가리골의 수심은 적당해 트레킹하기에 안성맞춤이다. 길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사람들이 밟고 다닌 흔적을 따라 걸으면 된다. 물이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흔적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계곡을 따라 물길을 그냥 첨벙첨벙 걸으면 된다.

처음에는 징검다리를 찾아 조심조심 건다가도 나중에는 물속을 아예 헤엄치듯 건너는 사람들도 더러 있다. 솔직히 그 기분은 상상 이상으로 짜릿하면서도 시원하다. 깊은 소(沼)를 만나면 피하는 것이 상책이지만, 안전한 곳에서는 배낭을 벗어 놓고 잠시 물놀이를 즐겨도 된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계곡물에 몸을 담그면 한여름 찜통더위쯤은 한 방에 사라진다.

아침가리에서는 시원한 물소리를 음악 삼아, 크고 작은 소와 바위가 어우러진 계곡의 비경을 감상하면서 걷다 보면 심심할 틈이 없다. 또 물줄기가 굽이치는 코너마다 자갈밭이나 모래톱이 형성돼 색다른 풍경을 선사한다. 물속을 걷다 보면 피라미와 꺽지 등 물고기가 휙휙 발등을 치며 지나가는 특별한 경험도 할 수 있다. 아름다운 풍경에 취해 계곡을 걷다가 맑고 차가운 물에 손과 발을 담그면 그동안 쌓아두었던 스트레스도 저 멀리 달아난다. 조경동 계곡 입구에서 약 4㎞ 상류 지점에는 검은 물빛을 자랑하는 뚝발소가 자리하고 있다. 아침가리골에서 가장 깊은 소다. 계곡 안에 지명이 존재하는 유일한 곳으로 검푸른 물빛이 그 깊이를 짐작게 한다. 물속에서는 쉬리와 갈겨니, 꺽지 등 아침가리골의 토종물고기들

원시의 청정 계곡

이 한가롭게 유영을 즐기고 있다.

뚝발소를 지나면서는 차츰 계곡은 넓어지고 하늘도 커지면서 갑자기 광활한 밭이 나타난다. 아침가리골 트레킹의 종착점이다. 여기에서는 누구라도 뒤를 한 번 돌아보며 아쉬워하기 마련이다. 그만큼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이 어느새 마음 깊이 자리했기 때문이리라. 진한 추억을 안고 아침가리골과 이별을 고한다.

아침가리골은 취사·야영이 금지돼 있다. 방동약수 위쪽 탐방안내센터나 홈페이지(www.komount.kr)에서 사전예약 해야 한다. 비가 오거나 물이 많이 불면 트레킹은 금물이다.

**글 | 사진** 유인근(여행칼럼니스트)

### 찾아가기

- 대중교통: 인제군 현리까지 가서 진동리행 버스를 탄다. 동서울종합터미널에서 직행버스를 이용하면 2시간 30분이면 도착한다. 현리에서 1시간 간격으로 운행하는 진동리행 군내버스로 환승, 방동교 앞 방동약수에서 하차한다.
- 승용차: 수도권에서 가려면 서울~양양고속도로를 이용해 인제IC(내린천휴게소)로 나와 현리 방면으로 7㎞ 직진 후 진방삼거리에서 우회전해 다시 9㎞ 직진, 방동2교를 건너 우측 방면으로 2㎞ 직진한다.

# 문장부호가 만드는 의미의 변화(2)

문장부호는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부정확한 것들이 상당수 섞여 있다. 만약 우리가 사용하는 말을 하루 종일 녹음해서 채록한 뒤, 그 문장들이 문법에 맞는지 혹은 사용한 단어들이 정확한 것인지를 확인해 본다면 많은 문장들이 적절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토록 부정확한 문장을 많이 사용하면서도 별로 불편함을 느끼거나 의미상 혼돈을 일으키지 않는 것은 그 문장의 발화 배경과 문맥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문맥을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렇지만 문자를 통한 언어생활에서는 단어 하나, 문장 부호 하나가 중요하다. 정서법에 맞추어 정확한 문장을 써야 한다. 그런데도 우리는 애매한 문장을 수시로 만들어낸다. 문장을 하나 예로 들어보자.

가. 김 과장은 길동이와 심청이를 데려다 주었다.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이 문장은 어떤 점에서 애매한 것일까? 이 문장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가-1. 김 과장이 데려다 준 사람은 길동이와 심청이 두 사람이다.

가-2. 김 과장이 데려다 준 사람은 심청이 한 사람인데, 다만 심청이를 데려다 줄 때 길동이가 동행하였다.

같은 문장인데 두 가지 의미로 읽힐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의미를 구분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될까? 바로 문장부호를 활용하면 큰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다.

가-3. 김 과장은, 길동이와 심청이를 데려다 주었다.

가-4. 김 과장은 길동이와, 심청이를 데려다 주었다.

쉼표를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 의미가 명확하게 구분됐다. 가-1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가-3처럼, 가-2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가-4처럼 쉼표를 찍었다.

물론 문장부호로 해결되지 않는 애매한 문장도 있다. 다음과 같은 문장을 보자.

나. 아버지의 초상화가 있다.

이 문장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나-1. 아버지를 그린 초상화가 있다.

나-2. 아버지 소유의 초상화가 있다.

나-1은 누구의 소유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초상화 속의 인물이 아버지라는 점이 중요하다. 그에 비해 나-2는 누구를 그린 초상화인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그림의 소유자가 아버지라는 점이 중요하다. 전혀 다른 의미의 문장이다. 위 문장은 문맥을 확인하기만 하면 즉시 해결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되도록 문장을 명확하게 쓰는 것이 의사소통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애매한 문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는 이미 중학교 과정부터 반영하고 있지만 꾸준히 학습하지 않으면 언어생활에 정착하지 못한다. 정확한 문장을 쓴다는 것은 글쓴이의 생각이 명료하게 정리됐다는 의미일 것이다. 정확한 문장을 쓰는 훈련을 하는 동안 우리의 생각도 깊어질 것이다.

**글** 김풍기(강원대 국어교육과 교수)

# 제21대 국회 후반기 김진표 국회의장 당선, 제74주년 제헌절 경축식 개최 등

| | |
|---|---|
| **7월 3일** | • 여야 원내대표,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위해 회동했으나 합의 결렬 |
| **7월 4일** | • 제21대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선출. 국회부의장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주·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선출<br>• 윤석열 대통령,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명<br>•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 |
| **7월 5일** | • 김진표 국회의장, 국회의장 비서실장에 박경미 전 청와대 대변인 임명 |
| **7월 6일** | • 국가정보원, 북한 피격 공무원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박지원, 서훈 전 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 |
| **7월 8일** |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 '당원권 6개월 정지' 결정<br>• 김진표 국회의장,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참의원 선거 유세 중 총격을 받고 숨진 것과 관련, "역대 최장수 일본 총리로 30여 년 간 국회의원으로서 의정에 힘써온 아베 전 총리의 공적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혀 |
| **7월 10일** | •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자진사퇴 |
| **7월 11일** | • 김진표 국회의장, 주한일본대사관에 마련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분향소를 찾아 조문<br>•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징계 결정 이후 차기 지도부를 권성동 원내대표의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하기로 결정 |
| **7월 12일** | • 김진표 국회의장, 첫 여야 원내대표 회동 주재<br>• 김진표 국회의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예방을 받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 |
| **7월 14일** | • 윤석열 대통령, 박병석 전 국회의장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여 |
| **7월 17일** | • 제74주년 제헌절 경축식 개최 |
| **7월 18일** | • 김진표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해 민생경제안정특위 구성 및 본회의 일정 합의 |
| **7월 19일** | •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 "도를 넘었다"며 윤 대통령의 사과와 명백한 진상 조사 요구 |
| **7월 21일** | • 김진표 국회의장, 소딕 사파예프 우즈베키스탄 상원 제1부의장을 접견하고 에너지·인프라 협력 및 고려인 역사 기념관 건립 등에 관한 의견 교환 |
| **7월 22일** | • 여야, 제21대국회 후반기 원구성에 합의(국민의힘 7개, 더불어민주당 11개 상임위원장 선출)하고 상임위원장 및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 |
| **7월 25일** | • 김진표 국회의장과 김영주·정진석 국회부의장·상임위원장단,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

**정리** 윤성혜

국회 ART GALLERY **8월 작품전** 국회의원회관 1층 아트갤러리

## 영원한 찰나

2022. 8. 1. - 8. 16.

작가 : 김미숙 | 추천 : 문정복 의원실

## 보물섬 남해군의 꿈과 희망

2022. 8. 17. - 8. 30.

작가 : 하미경 | 추천 : 하영제 의원실

살아보니 비로소 알게 되는 동네의 매력!
우리동네 재발견
살아보니
어때?
현지인만 아는 곳을 찾아 떠나는 우리 동네의 재발견을 시작해 본다.
매주 월요일 22시 30분
국회방송 NATV
www.natv.go.kr

| 발 간 등 록 번 호 |
|---|
| 31-9710176-000680-06 |

국회사무처
NATIONAL ASSEMBLY SECRETARIAT